



# 인권하루소식

2002년 11월

(제2207호 ~ 제222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일(금)  
제 22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지징벌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청송제2보호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지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들 역시 분리 수용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감호소 측은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피감호자 1백여명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집단단식을 한 바 있다. <본지 10월 17일자 참조>

3명의 피감호자들은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1주일간 금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청송 제2감호소 보안과장은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며 "이번 징벌은 단식과 관련해 언론이나 인터넷, 집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보복성이 짙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안과장은 "사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의 한 가족은 "30일 면회를 했는데, 1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했다고 한다"면서 "징벌기간동안 편지도 접견도 안 된다는데 무슨 일이 생길 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은 "이번 징벌은 피감호자들의 집단단식에 대한 과잉처벌 적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징벌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지' 징벌과 관련 행정법 시행령 145조 3항은 '의무관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 가족들의 말처럼 이들이 계속 단식을 했다면 감호소 측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감호자들의 연속된 단식은 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보호감호자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30일 단식에 참여한 수용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영]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열기에 초겨울의 기운도 무색해지고 있다. 31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과 국민은행 앞 인도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이 각각 집회를 열어, 30만 농민항쟁과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농민들은 오후 1시부터 '전국 이장단 기자회견'과 '농민대항쟁 투쟁선포식'을 잇따라 열고, 한국·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2004년 쌀 수입개방 현실화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다.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정부가 2004년 WTO재협상을 앞두고 (→2면에서 계속)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대전시 중구청 앞에선 강제철거당한 용두동 주민 42세대 중 35명이 "용두동 주민의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31일로 1백5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이며 연령도 60~70대가 많아 추위와 병·생계곤란 등으로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김종웅 집행위원장은 "철거하기 전에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개발 동의서를 마치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서명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이렇게 모은 동의서를 기반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대지보상가를 평당 1백12만3천원으로 정했고 대부분 10평 내외의 좁은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새로 살 곳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보상액만을 받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보상 대신 자신이 살고있던 건평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더 큰 아파트를 원할 땐 추가되는 평수에 대해 건설원가에 공급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두 번의 형식적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난 3월 21일부터 행정대집행, 곧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이후 중구청은 용역강제를 동원, 수차례에 걸쳐 철거와 위협을 감행했고 지난 7월 18일 마지막 남아있던 집들마저 완전히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철거 후 구청 측은 가수용단지라며 콘테이너 박스 3개를 마련해줬지만, 42세대의 주민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좁다. 지난 9월 6일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가수용단지 문제는 내가 장담하고 해결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철거민들은 △구속된 주민 2명 석방 △용역강제를 동원하고 주민외해공작을 행한 책임자 구속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상과 강제철거에 대한 피해 배상 △개발동의 절차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우린 해줄 것은 다 해줬

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거민 중 한 할머니는 "다른 남자 팬티까지 빨아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고스란히 빼앗겼다. 지금은 생계도 막막하다. 거기다 추위는 물려오는데 다들 노인들이라... 지금 몸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노숙이 장기화될 경우 철거민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용두동철거민대책위 임시대표 이옥희 씨는 "대부분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 열성적"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희)

(→1면에서 이어짐) 이미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농민회 회원이 아닌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농촌현장의 위기감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지난 8월부터 조직되고 있는 이장단 투쟁선언에는 현재까지 전국 67개 시군의 이장 6천6백94명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평택 팽성읍의 김덕인 씨는 "정부의 공문이나 전달하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농촌과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장들이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를 비롯해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여명의 이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농민들의 투쟁은 13일 서울로 집중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13일 여의도에서 30만 농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국민들에게 "30만이 집결하는 만큼, 당일 고속도로 이용과 여의도 일대 차량진입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기갑 전농경남도연맹 의장은 "마늘협상에 이어 자유무역협정마저 체결하는 등 자본주의적 잣대로 농업을 내팽개치는 정권과 정치권은 도저히 믿고 따를 수 없다"며 "질문에 찬 농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 지 지켜 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농 관계자는 "여주에서 3천명의 농민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참가자 수를 1/3로 줄일 것을 강요했다"며 "경찰의 대회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의 집회가 끝날 무렵 도로 맞은 편에선 1천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경제특구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한나라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4일까지 입장표명이 없거나 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밝힐 경우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무원노조도 이미 7만명이 파업결의를 마친 상태다. (이창조)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31일, 이주노동자 4명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조합원 비두(30), 꼬빌(30) 씨와 나이지리아 노동자 포울(23), 러시아 노동자 몬수로프(35) 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용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서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다. 포울 씨는 폭행을 저지르는 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보호소에 갇힌지 3개월이 넘었다. 몬수로프 씨 역시 보호소에서 4개월 넘게 살고 있다. 포울 씨는 편지에서 "보호소 내 급식은 언제나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는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근예)

# 이달의 인권 (2002년 10월)

## 흐름과 쟁점

### 1. 정부의 3대악법 추진... 얻을 것은 비난, 잃을 것은 민심

정부가 민중의 노동과 생존 및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국회에 상정해, 노동·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을 의결했다. (10.15)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로법 개정안은 주5일근무 도입을 발미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을 3대 악법이라 규정짓고 정부가 입법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15) 환경연합·참여연대 등 17개 사회단체들도 생존권·환경권·노동권 등을 후퇴시키는 3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10.23)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10.29)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 찬성으로 11월 4일과 5일 연차휴가 사용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10.30)

### 2. 지구강패,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계획을 저지하라!

대이라크 침략기도 등 미국의 일방주의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라크와 유엔은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북극에 관한 세부계획에 합의했다. (10.1) 그러나 미 의회는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10.10) 한편, 유엔차원에서 미국이 자동적 무력개입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대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우선 이라크에 대해 무기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사찰단의 보고를 검토한 후 무력사용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2단계 방식을 제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22~) 뜻대로 안 되자, 미국은 '유엔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10.22) 미국·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세계 곳곳에선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10.26) 앞서 한국에서도 여성·평화·민중단체들이 함께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 (10.8)

###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 (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을 가능케 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10.10~) 국가인권위는 의문사위에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10.29)

### 4. 청송보호감호소, 갇힌 철창을 뚫고 나오는 외침!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백여명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에 들어갔다. (10.12~14) 죄에 해당하는 형을 다 살고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을 당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하루 1~2천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의 인상과 가솔수 확대. 그런데 감호소 측은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 3명에게 1주일간의 보복성 질은 금지징벌처분을 내렸다. (10.31) 이들은 30일까지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논평

- '저항'은 정당하다 (10.5)
- 윤태식과 장세동 (10.12)
-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10.19)
- 기획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10.26)

##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 :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10.1/진영중)
- 감추어진 세계 (10.8/윤현식)
-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인권의 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10.15/변해진)
-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10.22/정국순)
-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10.29/진영중)

## 인권정보자료

- '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 (10.3)
- '간접고용실태보고서-과거법4년 실태', (10.9)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10.16)
- '강제실시 갈라잡이-특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10.24)
-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10.30)

## 기획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10.5)
-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10.18)

## 연재-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단체 공개편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10.3)
- 자유없는 '자유계사편' (10.3)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10.10)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전향장기수 복송차별, 예비조사 임용차별 (10.17)
- 주요 권고 :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 "유치정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10.24)
- 국가인권위 압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양패 (10.24)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10.31)

## 중요 판결

-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 (10.4)
- 서울지법, 87년 수지감 사건으로 기소된 윤태식 씨에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장세동 안기부정 등 '간첩사건 조작' 피의자들은 공소시효 만료 이유 기소조차 되지 않아 (10.1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일(토)

제 22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1일 고양시 공원관리노동자 7명이 똑 같이 일하고도 상용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2개의 공원이 새로 생겨 윤 씨 외에도 9명이 새로 채용됐다. "일은 쓰레기 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잡초 뽑고 고사목 관리하고 다른 공원관리원들과 똑같죠." 그런데 고양시청은 이들을 기존의 상용직 공원관리원과 달리 '일일사역직'이라고 구분해 불렀다. 그리고 상용직에겐 월 2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주는 반면, 이들의 임금은 3년이 지나도 계속 90만원을 받는다. 윤 씨는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도 인정을 했어요. 공원이 늘어나서 사람을 뽑은 건데 기존의 상용직처럼 임금을 똑같이 해줘야한다고."라고 말한다. 문제는 시청과 시청 산하의 공원관리사업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있다. 윤 씨는 "시청은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사업소는 시청에게 공원을 늘려놓고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냐고 해요"라며 속상해했다.

한편, 윤 씨 등 공원관리원들은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군사기밀누설)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고양시청으로부터 강요받기도 했다. 윤 씨는 공원에 무슨 군사

기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올 봄 시청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해수 법규부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나 휴전선 인근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구나 양심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 육지 위의 섬같은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흘동안 수용자 1백여 명의 집단 단식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였다. 이 소식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쥌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당 1~2천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 김치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해야 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정화'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높은 작업량과 낮은 보상금을 참을 수 없다고 그들은 몇번 씩 불기했다. 그들의 불기는 두터운 벽안에 갇혀 보복당해왔다. 이제는 그들이 보낸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긴급 조사를 촉구했고, 조사는 시작됐다. 은폐된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라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활동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 이번만은 제대로 응답해주길 촉구한다.

## 사회단체, 3대악법 폐기 촉구 한 목소리

###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다수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

사적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 직장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 등도 소개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실제로

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개혁 약속이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쓰러기 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사무국장은 "경제특구가 실현되면 노동권, 환경권이 우선 파괴될 것"이라며 "국토에 관한 종합적 환경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종모)

지난 2001년 8월 작업장 감시 때문에 최초로 파업을 했던 (주)대용의 박재현 노조위원장은 "당시에는 정말로 답답했다. 우리는 CCTV 8개가 명백하게 노동자 감시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감시 문제는 단체협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소개된 '직장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보면 노동자는 회사가 감시카메라로 자신에 대한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메일에 있어서도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메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대응 지침에는 감시기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한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화현 씨는 "작업장 감시는 프라이버시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긴 보네트워킹센터의 장여경 씨는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며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희)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관록이 깊다. 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인권학교와 인권캠프를 통해 인권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엠네스티의 교육담당자 김유진 씨는 "주로 강연이나 세미나는 엠네스티 초기부터 계속 있었지만 98년부터 인권학교와 인권캠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인권학교는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연주제는 인권의 역사, 여성, 동성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인지외금지 운동 등이며 매주 2번씩 5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주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다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강연에 꼬박꼬박 참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라고 전한다. 그렇지만 인권학교의 효과는 만만치 않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후 후원회원이거나 그룹활동을 하게 된다. 김유진 씨 본인도 98년 인권학교 참가자였다고 한다. 이와 달리 여름에 진행되는 인권캠프는 활동식 프로그램 위주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고등학생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이 함께 한다. 김유진 씨는 "조를 나눠 인권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과 연극을 한다. 재밌게 놀면서 인권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라며 "참가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국제엠네스티는 지역에서 경찰이나 교도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 중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학교의 경우 벌써 12기가 진행됐다. 구미나 안양 같은 지역에서는 각 그룹이 자체적으로 인권학교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런 방향은 앞으로도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 1월에는 인권교육을 하고픈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 요구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국제엠네스티가 펴낸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이에 대해 김 씨는 "지금은 번역 중이지만 내년에는 체험과 토론 위주의 엠네스티교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살짝 귀뜸해주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 사실상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로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감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밤샘조사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절돼야 하는 잘못된 관행. 이번 사건에서 조 씨는 숨지기 전날 밤부터 밤샘조사를 받고 있었다.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은 "밤샘 조사가 계속되는 한 고문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또한 밤샘조사 그 자체가 고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관행이 스스로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검찰은 옥박지르고 패는 대신, 수사기법을 과학화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외부

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에 대한 이같은 불신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일례로, 이미 93년 당시 김도연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수사 과정 중의 폭행은 물론 철야 수사와 같은 간접적 폭력도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그 이듬해 1월 당시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는 피의자를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려 독직폭행 혐의로 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됐고 이후 감봉조치를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8년 6월에도 창원지검 형사1부 김모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 사법연수생이 폭로한 바 있다.

수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 교수는 우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순 없겠지만,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2002년 11월 5일(화)

제 22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있으며 오히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 교수는 "검찰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는 판사들이 해야 한다"며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뿐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과장 역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은 소용없다는 것을 법원이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3년도 당시 안기부에 의한 고문 피해자인 김삼석 씨는 "이제껏 고문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정보기관이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영)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2면에서 계속)

###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

- 2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은 사유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23-2. 피고인이 특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23-3.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를 판결에 명시적으로 밝히야 한다.

##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87년 봄 그 분노의 함성을 불러일으켰던 끔찍한 고문치사 사건이 떠오른다.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권력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이들을 감싸고들던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을 저지른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15년이 흐른 지금, 수사과정에서 고문치사가 다시 일어났으며, 수사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정권은? 정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15년 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이고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고문치사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백도 없이 오직 힘만 믿고 까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원칙은 '가끔' 예외를 발휘하나 보다. 범법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이처럼 때로는 가혹하다.

어떤 이에게는 가혹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도 사람에 따라선 봄날의 순풍처럼 따스하기 그지없다.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결과를 종결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한 순간의 바람(風)일 뿐이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행태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는 제보자인 김대업씨를 제외하곤 제대로 심문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녹음테이프의 진위여부에 관해선 일부언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질 않나,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역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사회의 합의는 무너진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이처럼 중대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법이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는 때로는 국민 일부에 대한 봉사를 우선하며, 정치적으로 재빠른 줄타기를 감행하며, 아주 가끔은 부여되지도 않은 권한까지 사용한다. 법은 법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결과 법은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사람은 타고난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대접이 달라진다.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살고.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1. '탁 치니 억~'의 재연?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한 사실 확인(10.28)→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국과수 부검결과, "조씨,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쇼크와 외부충격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숨져"(11.2)→폭행수사관 3명, 독직폭행 치사 혐의 적용 방침/ 대검감찰부, '폭행수사관 더 있다' 진술 확보(11.3)

### 2. 국회 앞, 이글거리는 민중의 분노

민주노총, 경제특구·근기법 개악·공무원조합 등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10.29)/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안 반대 쟁의행위 결의(10.30)/ 전국이장단,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쌀 수입개방 반대 기자회견(10.31)/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3개 법안 폐기 촉구(11.1)

### 3. 창살 속 절규, 사회보호법 폐지!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확대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올들어 세번째(10.30)→참여자 4백여명으로 늘어(11.3)/ 감호소, 집단 단식 벌인 수용자 중 3명에게 1주일간 금지징벌(10.31)

### 4. 테러전쟁의 '테러'

러 체첸반군 인질극 무력진압 과정, 독가스 증독 숨진 인질 1백17명 달해(10.28)/ 러, 체첸에서 특별군사작전 재개(10.28)/ 미·영, 러 인질범 강경진압 옹호(10.28)

5. 기타 : 국방부, 허일병사건 '노모 중사 총기오발' 사실 부인→의문사위, '국방부 발표는 참고인 진술 무리하게 반복시킨 것'(10.29)/ 인권위,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원인, 서울시 등 관련기관 직무소홀"(10.30)/ 화성의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들, 단식농성...인권침해 중단, 단속 추방 중단, 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10.31)/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노동자 감시 대응방안, 규제입법 필요성 토론회(11.1)/ 경찰, 강도 용의자 붙잡으려 한 사람에게 권총 쏘 숨지게 해(11.3)

(→1면 기사 이어짐)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국회청문회처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제안 국회통과 저지

###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파업 중단과 단위노조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폐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기아·쌍용 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업 중심으로 1백

68개 사업장 12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 2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파업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역 앞에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는 경찰의 삼엄한 불신검문으로 봉쇄됐으나, 총파업 결의대회 직전인 오후 5시 성사됐다.

공무원노조 민접기 전남지역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경찰의 한양대 전야제 폭력진압과 노동자대회 봉쇄로 반쪽 집회가 돼 아쉽지만 권력의 탄압 속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02년 11월 6일(수)

제 22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노조탄압에 맞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옥중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앞서 4일 열렸던 한양대 전야제에서 연행된 동료들을 면회하기 위해 동부경찰서를 방문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 불법연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본부 소속 거창지부 김근호 씨가 연행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간에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건국대 근처 해민병원에 입원 중이다. 같이 면회를 신청했던 노조원 2명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북부경찰서에서 면회를 신청하던 3명의 노조원이 연행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완전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다음 국회로 넘어간 것 뿐"이라며, 총파업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어 "국회 재경위에서 6일 논의될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해 각계각층 합동 기자회견과 전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7일 전국 빈민대회,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3일 전국농민대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정당이 법안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하반기 투쟁정국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종모)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별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법용)

## 국회 행사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사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25개 청원이 행사위에 상정되어 있고 △각 법률들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커서 여야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 제정되는 법은 모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하면서 관련 법률·청원 모두를 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등)는 5일 성명에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중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한국전쟁전후에 자행됐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행사위를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행사위에는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외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특별법',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등이 상정되어 있다. (법용)

##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현재 위험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험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 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 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에서 "위헌결정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험결정에 충실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불온통신의 내용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에 대해선 "불온통신의 내용이 위헌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 못하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을 존속한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용)

##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량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엮은이 :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 2002년 10월 /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총련 대의원들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가?

이에 대해 한총련 변론활동을 전개해 온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대폭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써 이과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법적 영역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최은아)

<주요 목차>

- I.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변론지침
- II. 자료 : 5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에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법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7일(목)

제 2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의 단식 행렬이 6일까지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내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성명을 내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위생·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재사회화에 맞추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출소 결정은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변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이번 단식농성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와 구제에 그치지 말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보호감호제

도의 폐지를 권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도 "국가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권리구제 및 법령, 제도,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엔 청송감호소 관련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된 단식농성에 참가하는 수감자들의 숫자는 날로

불어 5백명을 넘었다고 6일 수용자와 면회한 정보 씨가 밝혔다. 4일 법무부는 이번 집단단식과 관련 근로보상금을 20%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근로보상금 몇백원 더 받겠다고 시작한 농성이 아니"라며 "수용자들의 목표는 사회보호법 폐지"라고 전했다. 반면 청송제2보호감호소 보안과장은 "단식참여자는 전체 750명 중 3백여명인데, 8일 정오부터 단식을 풀기로 수용자 대표들과 이야기를 끝냈다"고 6일 말했다.

이번 단식이 감호소가 밝힌대로 8일 끝난다 해도, 보호감호제도가 전면 개선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 등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김보영·이주영]

### 세번째 반딧불이 <신의 아이들>

다음주 목요일(14일) 아트큐브에서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을 밝힌다. 이번달 반딧불의 주인공은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을 담은 영상에세이 <신의 아이들>이다. 필리핀의 파야타스 지역은 우리나라의 난지도와 같은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 곳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개넌 고물들'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사람들을 '신의 아이들'이라 명명한 이 영화는 이들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끈질긴 '생명력'과 그 밑바닥에 깔린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이들이 굶주림, 불치병 등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생활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보다 끈질기게 생을 이어가는 것을 담담히 보여주고 있다. 굶주림을 견디며 약취가 코를 찌르는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그들의 모습은 '밑바닥 인생들의 잡초와 같은 끈기'라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고 작품은 주장한다. 그것은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의 숭고한 모습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다.

2002년 베를린영화제를 비롯해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뉴디렉터즈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고 지난 10월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열렸던 제5회 시네마인비엔테 국제환경영화제에서 장편부문의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 영화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된다.

이번달 반딧불은 영화시작에 앞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왜? 빈곤이 인권의 문제인가? 신자유주의 이후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이란 주제로 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의 이야기와 사랑방 상임활동가 고근에 씨의 파야타스 지역을 둘러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김정아]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지 1월 26일자>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 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구치소 입감 당시부터 기침, 정신이상, 심폐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동료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의료조치와 병실수용을 요구했음에도, 구치소측은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병실수용 요구를 묵살했으며 △정신이상증세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수원구치소와 의무사무관 홍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행형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씨의 X-ray 촬영을 지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한차례도 치료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은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근무일지에 '박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 씨는 치료 소홀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구치소 의무과 직원에게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적으라고 지시하는 등 사후에 박씨의 건강진단부 내용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씨는 일단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 밝혀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남편사별 중국동포

####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중국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징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인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김씨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만에 한국인 배우자가 위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간이귀화 신청접수를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올해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의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예외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차별적인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이어 우 씨는 "그러나 재소자 의료문제는 현재 배치된 의료인력이나 자원을 볼 때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정책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1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는 53명으로 수용자가 6만3천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 1인이 수용자 1천명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비 예산도 수용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됐다 사망한 사람은 올해 본지가 확인한 것만 해도 박 씨를 비롯 3명이나 된다. [이주영]

그 법률의 타당성 정도까지는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국회의 입법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제44조도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법령의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이란 조문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진정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

한편 지난달 28일 인권위 정책및대의협력소위는 개별 권리구제가 아닌 법제개선의 차원으로 '외국인 간이귀화제도'를 다뤘다. 이때 개선권고를 하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표명을 보류하자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결혼한 상태로 2년이 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애를 낳아 양육해야 하거나 △이혼 후 본인이 원할 때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8일(금)

제 22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투쟁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6일 경제특구법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바꾸고 애초 국제공항·항만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 요건을 훨씬 완화해 교통·통신 등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8일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오후 4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가져올 피해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유구역을 유지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지정 요건까지 완화해 전국이 노동권이 말살되는 자유구역이 될 위기"라며 규탄했다. 애초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조차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라면 여러 지역에서 자유구역 신청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제약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약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이

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2면에서 계속)

##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중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2면에서 계속)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추구 결의대회

7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추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피학살 민간인 유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1백여 명은 통합특별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먼저 학살규명위 이혜동 상임대표는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대한 믿음을 북돋았다. 학살규명위 임광빈 사무처장은 "한국전쟁 전후 1백만 민간인 학살사건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며, 진상규명 입법에 미온적인 국회를 규탄했다. 통합특별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로 넘겨져, 올해 안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본지 11월 6일자 참조)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배상선 씨와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눈과 귀를 뜨게끔 하자"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격려했다.

피학살 민간인 유족을 대표해 강화 희생자유족회 서영선 회장은 "51년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이 모두 (우익청년단에 의해) 희생당했다"라며, "하지만 억울하고 슬픈 일을 50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통탄했다. 이어 "우리는 왜곡된 역사에 태양을 비추도록 싸워야 한다"라고 투쟁의지를 높였다.

끝으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백만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당시 남한인구의 1/20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라며, 민간인학살사건의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은 국가 도덕성 회

복의 첫 걸음"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 후 유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나라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이회창 후보 규탄집회를 벌였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범용)

(→1면 '경제자유구역법' 기사 이어짐)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도 감면된다. 자유구역 내에선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설립도 자유로워지며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국회 앞에서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 중 3백여명이 7일 밤 9시 50분께 경찰에 연행, 10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8일 새벽 1시 현재 민주노총은 "경찰은 국회 앞에 새로 모여든 노동자 2백여명 중 40명 가량

을 다시 연행해갔다"고 밝혔다. 또 두 차례의 연행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원 산업지회 조대훈 씨 등 방패에 맞아 다친 사람이 여럿 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1면 '의문사위' 기사 이어짐)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긴급히 소견을 내,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주된 이유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조사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기간연장을 보장받자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법사위가 낸) 개정안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로 29일째 국회 앞 농성 중인 유가족 대책위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기간 연장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 연장만 되는 의문사법이 통과한다면 사건 철회는 물론 낙선투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8일 법안 심사소위의 재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영)

## 〈중요판결〉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관행이 근절돼야 하며, 차제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대우차 경찰폭력 만행사건 관련, 부상자 김아무개 씨 등 5명에게 "국가는 2천6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노조사무실로 향하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9일(토)

제 22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인양동안구, 용역강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8일 동안구청은 이곳에 용역강패를 동원, 노점을 강제철거했다. 새벽 5시경 용역강패 2백50여명이 들이닥쳐 전국노점상연합 안양지역연합회 김창호 지역장 등 철야농성 후 잠을 자던 노점상 36명을 폭행했다. 철거용역원들은 심지어 칼까지 들고 와 위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노점상은 누굴 심하게 다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밖에 다른 노점상들도 철거용역원들의 구타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이번 철거는 평촌1번가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리어카 하나를 세가족이 하루씩 번갈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영세했던 노점상들은 계속해서 안양시장과 동안구청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 4일 노점상들은 구청에 항의방문을 했고 이때 이진호 동안구청장은 “새벽3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강제철거가 있을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그때부터 노점상들은 유일한 생존 수단인 리어카를 지키기 위해, 천막을 치고 불안한 합숙 생활을 시작했다.

언제 철거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4일이 지났고 바로 8일 새벽 5시, 약 2백50명 가량의 용역강패들을 동원, 구청은 군사작전을 퍼듯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용역강패들은 리어카 8개 중 6개를 가져갔고 나머지도 거의 쓸 수 없게 돼버렸다. 물론 현장에는 경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멀리서 수수방관하고 있었을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발생한 사건은 오전부터 구청과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

온 이들에게조차 큰 충격이었다. 특히, 바로 전날인 7일 안기영 도의원, 최창남 목사 등 세명의 지역사회단체 대표가 구청장과 면담해 강제단속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화 등 합리적 방

법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러한 폭력이 행해졌다. 또 용역강패들은 새벽 5시부터 시작, 아침8시 무렵까지 세 번에 걸쳐 이들을 폭행했으며 7시부터 행해진 마지막 폭행은 출근하는 시민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김금동 과장은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서 계속)

##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자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 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관계자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때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 구속기간 연장 등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혀야 하는 이야기다. 참고인 조사는 법원에서 증인출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법방해죄란 것도 피의자의 자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발상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구속기간 연장이 그렇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것이 조직범죄든 아니든, 구속기간을 연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직 공식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책’에서 보이는 검찰의 인권의식은 저열하기 그지없다.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뒤바꾸면, 지금까지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유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대책’은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검토조차 필요없는 방안이다. 이제라도 자백 위주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라.

##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원 씨는 지난 달 16일 전북대병원(정신과장 정상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 2주간의 검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진단서에서 “환자는 극단적 감정변화를 동반하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한 기간동안의 정신과적 관찰 및 평가와 함께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래 남에게 베푸는 착한 애였고 건감했는데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 씨의 매형 지춘현 씨는 김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김 씨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이후부터였다. 같은 해 11월 의왕시 계요병원은 김 씨에 대해 종합진료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후 ‘공주치료감호소’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 이듬해인 2001년 2월 형이 확정된 이후 최근까지 김 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왔다. 김 씨의 상태는 동료 재소자들이나 교도소 측이 보기에 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단을 위해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김 씨는 검사를 거부하면서 몇 시간 동안 발과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똑바로 서 있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하루는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6~7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어 쓰러질 지경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이에 김 씨가 수감 중이던 전주교도소(소장 강보운)가 지난달 17일 전북대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전주지검(김경진 검사)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전주지검은 △추가 감정이 필요하고 △대검찰청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형기의 절반이 남아있으며 △공안사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불허했고, 지난 4일 추가감정을 위해 김 씨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시켰다.

이와 관련, 8일 낮 1시 민가협, 전국연합, 불교인권위, 통일연대 등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대원 씨를 조속히 석방시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주치료감호소가 실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곳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지금은 추가감정이 아닌 당장의 석방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7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중국·쿠바·일본·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이 기권했다. 한국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98개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법률가위원회, 고문방지연합 등 대표적 국제인권단체들은 선택의정서 채택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할 것을 국가들에 촉구했다. (이주영)

## 울림

###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제6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연건동) 4층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초점을 맞춘 24편의 국내외 작품이 소개된다.

‘아르헨티나 혁명은 시작된다’, ‘진보적 극영화’, ‘세계화의 그늘과 민중의 투쟁’,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회고’라는 네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해외부문에는 총 14편이 상영된다. 아르헨티나 노동영상집단 ‘노동자의 눈’이 만든 3편의 영화는 그곳의 실업운동 <베게페로스>을 비롯해 치열한 생존권운동을 담고 있다. 노동영화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켄 로치의 작품도 빠지지 않았다. 철도 민영화의 파멸적인 결과를 냉정하게 묘사한 <네비게이터>는 지난해 만들어진 그의 신작이다. 미국영화계에서 진보적인 목소리 내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팀 로빈스의 <요람은 흔들리리라>도 이번 영화제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예술과 정치에 대한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복합적인 관계를 탐구하며 계급투쟁의 기억을 들려준다.

상영작의 절반은 한국 노동영화의 성과를 보여준다.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조의 원년, 철도노조의 발걸음>, <1980년 4월 사북의 봄 - 먼지, 사북을 묻다>, <동행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관한 짧은 보고서 2> 등 전문영상집단과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카메라를 든 노동자’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새내기들의 성과도 둘러볼 수 있다. 17일엔 올해 노동영상운동의 주요한 활동성과를 점검하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www.inp89.org/fest (김정아)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당시 교정청에서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속대 등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해서 단식을 중단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집단단식농성은 식언을 일삼는 교정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7일 단식 참가자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씨는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면회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보안과장에 따르면, 이씨는 7일 밤 외부병원에 나가 위험진단을 받았다. 또 감호소의 무과 관계자는 이외에도 여러 참가자들이 수액주사를 맞고 있다고 밝혀, 단식참가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

8일 보안과장은 "오늘 조사 수용됐던 수감자들을 자기 방에 다 돌려보냈다"며 "법무부 보호국에서 늦어도 12월 5일까지 감호소를 방문해 피감호자와 면담할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장은 "7일과 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피감호자들을 만나고 단식중단 여부에 대한 집단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폐기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아침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가는 식으로 노동·환경·여성·조세·교육·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법안폐기를 위해 10일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2일 빈민대회, 13일 농민총결기투쟁과 연대해,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8일 아침 9시 수도권지역 간부와 조합원들이 다시 집결해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또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박종모]

# ICC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관을 진행하는 국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

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법 마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범죄의 시효부작용 원칙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민변은 "시효부작용 원칙의 수용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운동과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후 이행입법을 마련할 때, 향후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 자행됐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은 체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면책하는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부터 이같은 압력을 가해왔다. [이주영]

(→1면 '안양등안구 노점철폐' 기사 이어짐)

이 구청장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투입했다. 솔직히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밝혔다.

이날 오후 노점상들은 아침나절의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폭행을 당한 한 아주머니는 "남편은 교통사고 때문에 다쳐서 석달동안 병원에 다녔고 애들은 중고 등학생이다. 매일 벌린 돈 갚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 갚기도 전에 리어카를 뺏겼으니 어떡하나? 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이는 "지금 앞에 걸려 6개월밖에 못산다고 선고를 받은 분도 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진통제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저녁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최용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2일(화)

제 22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고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제안했다. 그 중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특히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법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보호법

한편, 김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에서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상습범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초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억압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삼청교육대의 문제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는 형법 규정에서 의거하고 있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헌적'이라며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범조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해석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몇 가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그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 전반을 수시로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 '신의 아이들'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을 담은 영상에세이

○ 때 :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 곳 : 광화문 아트큐브

# 한국정부는 답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이행 관련 질문제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질문목록(list of issues)을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회의에 임해야 한다. <본지 10월 11일자 참조>

질문목록에서 첫째로, 위원회는 구체적인 통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교육·보건·사회보장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소년사범 등에 소요된 예산, 장애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의 임신·낙태·약물남용·자살·사고·정신보건관련 통계, 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노동관련 통계 등이다. 이는 정부 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인쇄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질문한다. 1차 보고서 심사 후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특히 교육의 목적과 입양관련 조치들에 관해)를 묻고 있고,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96년 1차 보고서 심사 회의 당시 한국 정부가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여태까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홍보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동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 기구, 정책,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한다. 이 역시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라는 주요 문제들은 여아·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가족·사회·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이른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날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가 취할 아동권 정책의 방향을 보여줄 것이란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류은숙]

<알림> 인권이야기는 다음주부터 새로운 필자로 찾아갑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보장 요구 집 단연가파업(11.4~5)/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지지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11.5)/ 국회 재경위, 경제특구법안 명칭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변경, 요건 완화 자유구역의 전국화 가능케 하는 법안 의결(11.6)→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통과 지지 국회 앞 노숙농성(11.7)→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11.8)→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11.10)

**2. 물고문까지~ 백**  
홍경령 검사, 구속(11.6)/ 대검, 조모씨 공범 혐의자 검찰수사관 물고문 확인(11.8)

**3. 생색내기 의문사법 개정은 사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화사실에 확인권한, 피진정기관 자료제출 거부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한 부여', 기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문사법 개정안 손질→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 되는 것에 반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보호감호제도 폐지 촉구(11.6)/ 인권위, 청송2보호감호소 진정조사 착수(11.7) 피감호자들, 13일째 단식 중단...법무부가 최대한 피감호자들의 요구 받아들일겠다는 약속 받고(11.11)

**5. 살얼음판 이라크**  
유엔안보리, 이라크에 대한 강제적 무장해제 담은 미주도 이라크 결의안 채택(11.8)/ 이라크 침공 반대 수십만명 시위대,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시위(11.9)

**6. 기타 : 국회 과기정통위, 정통부 규제권한 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폐질환 재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11.6)/ 한국전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통과(11.7)/ 국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비준동의안 통과(11.8)/ 안양시 동안구청, 평촌1번가 노점 용역강제 동원 강제철거(11.8)**

**◎주요 판결 : 서울지법(아래 생략), 행려자 오인 6년4개월 정신병원 감금당한 네팔인 노동자에 국가배상 판결(11.6)/ 경찰의 불법집회 봉쇄 명분 집회장소 주변 노동자와 행인 불법연행 국가배상 판결(11.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3일(수)  
제 22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철도공안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몸을 질질 끄는 등 노숙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도공안에 의한 역 주변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현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3시 경 노숙인 이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역 안에서 잠을 자다 철도 공안원들에 의해 20~30미터 이상 바닥에 질질 끌려 역 밖으로 내쫓겼다”며 “이로 인해 이 씨는 상반신 가슴과 어깨·등·귀 등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문 씨는 “지난 달 21일 내지 22일 저녁 무렵, 노숙인 김모 씨는 서울역 내 공안분실에서 이름·주소·주민번호 등 신분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을 더듬거린다는 이유로 철도공안이 욕설과 함께 목덜미 부위에 컵에 담아 온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전했다.

문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 치료받으러 온 이 씨와 김 씨에게서 이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이 일로 김 씨는 목덜미에 1~2도의 화상을 입어 10여일 넘게 치료를 받았고, 이 씨는 현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역 공안담당관실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뭔가 잘못 알고 제보한 것”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은 그 날 근무도 안 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씨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직접 목격했고, 실제 안 당하고서 정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공안담당관실에서 책

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평소에도 노숙인들이 철도공안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현준 씨는 “노숙인들이 공안분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 폭행당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심지어 공안원들이 오면, 파출소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출소 순경이나 흥익회 매점, 역 주변 포장마차 아줌마 다들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유의 집' 노숙인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최성영 씨는 “공안분실에서 취조도 많이 당하지만 지하실(서울역 1층)에 내려가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서울역은 광장과 연결돼 있는 지상 2층에 철도청 공안분실이 있고 1층에 조사실과 보호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공안담당실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목사는 “철도 공안들 입장에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책임감 같은 게 있다는 건 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노숙인들을 막대하거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준 씨는 이번 사건을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철도청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공안분실과 지하실(서울역1층)까지 다 공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지은이 : 김의석 등 / 펴낸 날 : 2002년 10월 / 157쪽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종료의 전 과정 속에서 보여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집은 청소년 스스로 싸워나갈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민주노총, 전교조가 작성한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제1장 일하는 청소년과 법  
 제2장 실제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법 이야기  
 제3장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  
 제4장 사례 묻고 답하기(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근로조건 위반, 해고, 산업재해, 폭행·폭언·무시, 직장성희롱)  
 제5장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모음(최은아)

# '남편사별'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 한국정부도, 중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이 귀화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그녀는 한국에 들어온 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외국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이들은 분명 외국국적 상태지만, 몇몇은 양 국가의 외면 속에 스스로를 무국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12일 서울 구로구 '중국동포의 집'에서 만난 중국인동포 김아무개 씨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2000년 7월 중국에서 한국인 한아무개 씨와 결혼한 후 2001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한국에 들어와 한씨의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불행은 너무도 빨리 시작됐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한씨가 그해 7월 산재로 사망한 것. "(한국) 제도도 잘 모르고... 남편이 돌아가니

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멍청해지고 어이가 없고..." 김씨는 당시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김씨의 불행은 한씨의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졌다. 김씨에 따르면, 한씨의 누님과 매형 부부가 한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위조해 김씨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그 빚으로 인해 현재 김씨의 집은 법원경매에 들어갔으며, 이에 맞서 김씨는 '중국동포의 집'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김씨는 한 달에 며칠 동안만 다른 집안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중국 대사관에 호소하기도 하고, 한국정부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도 모두 도움을 주기 싫어하며 김씨를 내뱉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씨는 "중국 대사관에선 나보고 중국사람 아니라고 하고, 한국에선 한국사람 아니라고 합니다"라며, "제가 바로 무국적 상태지요"라고 하소연했다. 물론 중국국적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김씨는 현재 중국인이다.

"나는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면 돌아가겠지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돌아가도 집이 없습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김씨는 한국에서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범용)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 11월 8일자 참조>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집단단식을 계기로 다시금 불거진 보호감호제 폐지 논의는 애써 외면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자체 노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국 보안1과 관계자는 "감호자들의 요구사안은 근로보상금과 가출소였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단식을 풀 것이고 이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며 "문제를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안1과 윤길현 계장은 "법무부는 예초 근로보상금 20% 인상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번 단식으로 시기가 당겨졌을 뿐"이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나 개정 문제는 교정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호국 관계자는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며 "다음달 감호소 방문은 평소처럼 가출소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위원회에 감호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호법폐지나 개정에 관한 입장도 보호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법무부 내에서 보호감호 업무중 수용과 관리 분야는 교정국으로, 가출소 부분은 보호국으로 이분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소를 비롯해 보호국이나 교정국 모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존재여부,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번 단식 참가자들을 만나 요구사안을 조사할 계획도 없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는 커녕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나 귀류 확대와 같은 처우개선 및 개방적인 운영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영)

### (기사 바로 잡습니다)

•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해 국적제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씨가 스스로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적제정상 김씨는 중국인입니다. 김씨가 무국적자든 중국인이든 당시 기사의 논조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11월 7일자 기사의 김씨와 오늘 기사의 김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4일(목)

제 22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우리 쌀을 지키자"

### 여의도별, 십만 농민 함성 가득

13일 여의도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로 넘실거렸다. 이날 여의도 둔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는 전국에서 10만 명 가까운 농민들이 참가했다. 제주도에서 2백70명의 농민들이 비행기 2대에 나눠 타고 왔는가 하면, 진도 농민들은 전날 밤 고향을 출발해 서울에 오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전농 정현찬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해방 후 최대규모의 농민집회"라며 "이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수입개방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목숨 줄을 버텨온 우리 농업이 아예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쌀시장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가시명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내년 초 국회가 비준하면, 값싼 칠레산 과일·채소류가 대량 수입돼 과채류 생산 농가를 파탄에 빠뜨릴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전농 문경식 부의장은 "몇 년 전 미국산 오렌지 수입만으로도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락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과채류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해 농민을 보호한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농업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환경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한결같이 쌀 전면 수입개방 등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전주 완주군에서 벼·담배·채소 농사를 짓는다는 박창규 씨는 "미국 쌀이 들어오면 우리 쌀

농사는 망한다"며 "지금도 이미 농사 짓느라 진 빚이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박 씨는 "외국쌀은 농약도 많이 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들이 농사지어 우리 국민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한 아주머니는 "쌀이 개방되면, 농민들이 다른 특수작물로 몰리고 그러면 과일생산되니까 농산물 값이 다 떨어진다"며 "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농산물도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산청에서 쌀농

사 짓는 부모님을 따라온 강주원, 주호 초등학교 형제는 집회 내용을 묻자 "외국에서 쌀 들어오는 걸 막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참석해 농업정책에 관해 연설했다. 농민들 일부는 노 후보나 정 후보에 대해 야유를 퍼붓는 등 제도권 정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농민들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식량자급목표 법제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거부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 보장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 마련 등 8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올 25일에도 제2차 농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 양대노총, 국회앞 1박2일 노숙투쟁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노숙투쟁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부터 양대 노총 조합원 5백여명은 전국 30여개 국회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민주당 시·도 본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12일 양대 노총과 녹색연합·민교협·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번 회기 내 국회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역시 11일 각 정당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법안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환경·교육·장애·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을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모)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주요 활동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인권위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조사'가 꼽혔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가진 인권전담 국가기관에 거는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쌓이는 진정사건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가 증명하고 있다. 9월 30일 현재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분류를 보면, 총 진정건수 2천 7백 86건 중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은 8백4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30%가 넘고, 이는 진정사안 분류 중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다음은 구금 시설 중 가장 진정이 많이 접수된 5개 소에 대한 진정 현황이다.

피진정기관 (진정수)	진정수
1 광주교도소 (90)	90
2 청송제2교도소 (80)	80
3 대구교도소 (60)	60
4 대전교도소 (60)	60
5 청송교도소 (56)	56

(9월 30일 기준, 국가인권위 통계)

이처럼 구금시설과 관련해 많은 진정사건이 접수됐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인권위가 구제결정을 한 진정 수는 총 4건에 불과하다. 인권위 통계 상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매달 평균 1백여 건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상당수의 사건이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 진정인 스스로 취하하

거나 인권위가 각하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만, 인권위는 아직까지 기각 건수, 조사 중인 건수, 각하 건수에 대해서는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많은 진정이 계속 쌓여간다는 사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진정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설립 직후 지난해 12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16건을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진정을 취하한 3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서만 각하결정이 내려졌을 뿐 나머지 12건은 아직도 조사중에 있다.

쌓이는 진정 속에 '신속한 구제'를 기다리는 진정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권위는 깨달아야 한다.

결정만 하면 '땡'인가?

또 진정사건 구제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 최초의 구제결정이었던 울산 구치소 구송우 씨 사망 진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외뢰' 결정(2001년 12월)이 내려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구 씨 사망사건(담당 울산지검 유현식 검사)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보인 성의는 11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것.

구씨의 동생은 "힘없는 서민이니까, 시간을 길게 지연시키는 것 아니겠냐"고 검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편, 인권위에 대해서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구씨 사망사건 진정을 도왔던 인권 실천시민연대 오창의 국장은 "인권위는 구씨 사건 수사의뢰와 관련해 수사 진척에 대해 검찰에 질의 공문을 한번 보낸 게 전부"라며 후속조치에 불만을 털어냈다. 그는 "인권위가 스스로 법제상의 한계를 이유로 활동을 제

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나와있지 않아도 기자 회견이나 사건진행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수사 촉구 방법이 어디 법에 나와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인권위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표류하는 실태조사

침해진정 조사와 더불어 구금시설의 인권상황 개선을 기대하며 주목했던 인권위의 활동은 '구금시설 내 실태조사'다. 지난해 말, 구송우 씨가 울산 구치소에서 사망하고 이어 서울 구치소의 조순원 씨,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가 사망하면서 구금시설내 의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2002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중엔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포함됐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4주째 법무부가 협의를 미루고 있어, 본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12월까지 예정된 조사가 이처럼 지연된다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구제와 실태조사가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권위는 도무지 외부에 꺼내놓지 않는다.

따라서 인력부족 때문인지 전문성의 문제인지 혹은 기관의 비협조 때문인지, 법제상의 문제인지 외부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인권위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5일(금)

제 22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경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오후 3시 30분경 법안 통과가 알려지자, 집회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한나라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양대 노총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이 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착각하고 있다"라며

만화사랑방



이동수

비난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두고 사회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기준의 폐지 혹은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 추세에 있고,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 자국에서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공해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꼴이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또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여성공감 등 8개 장애인 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해서 총파업, 위헌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회각계의 법 폐지투쟁이 예상된다. [고근예]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 때 : 2002. 11. 30 ~ 12. 1
- ▷ 곳 : 조지원청소년유스호스텔
- ▷ 세부행사
  - 대주제토론
  - 인권단체 연대운동 평가·전망
  - 소주제토론
  -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등
- ▷ 접수 : 02-744-7916
- 한국동성애자연합 김병석

#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 통과

##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는 또 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다. 일단 위원회를 살려내고, 내년에 반드시 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다." 14일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문사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이 36일간의 노숙농성을 접으며 밝힌 소감이다.

이날 개정된 의문사법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각 결정된 사건들 중 진정인이 명백히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사위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는 사건과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사권한이 다소 강화돼 △관련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의문사위는 검찰의 승인 아래 관련기관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생색내기' 기만적 의문사특별법 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조사권한 중 겨우 통신사실 확인권한만 통과시키고 그의 특별검사의 임명을 비롯한 압수수색권 및 계좌추적권, 청문회 설치와 위증죄의 처벌을 국회가 외면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도 "참고인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는 경우 통화사실을 확인하며 추궁할 수는 있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조사권한 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지금은 일단 위원회를 다시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의문사법 4차 개정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의문사법 개정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범용)

#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 시 타카시 씨는 "일본의 경우 크게 호적제도, 외국인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

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 11자리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시작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짚어라! 주기네트 시민행동' 공동대표 미야자키 토시로 씨는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나 구가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 부담만 높일 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시로 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거부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에서 보낸 번호통지의 수취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행정처분불복신청'을 하는 것. 둘째는 개인 정보의 '상급기관전송거부운동'. 즉, 개인 정보를 도나 현, 국가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복'이다. 현재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전송을 거부한 상태이고, 요코하마의 경우 3백45만명의 인구 중 84만명(4명 중 1명)이 거부하고 있다.

내년 8월에는 주기네트 카드가 발행된다. 이것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지문정보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한일 공동성명과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투쟁 등에 합의했다. (최용희)

# 전주교도소,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반입 불허

## "직원들 악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숙지해서 잘 돌보고 근무를 잘 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수용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이 왜 이렇게 근무 안 하느냐'며 코를 건다. 그러면 직원들이 위축되고 (수용자들과) 마찰이 생긴다"라고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지만, 박00 씨한테는 교화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책을 보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법령이나 규칙 그 어디에서 법령 자체의 열람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법령자료집' 반입을 불허한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6일(토)

제 22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제도 개선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서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원을 비롯해 통신산업·전기·가스·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의 쟁의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장은 사전 조정기간 15일에 더해, 중재기간 15일 모두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제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10일의

기간을 거쳐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이 봉쇄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96년 헌법재판관 8명 중 김진

우 재판관 등 5명은 관련 조항에 대해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했을 경우에는 냉각기간인 15일 이내에 중재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강제중재에 일단 회부하게 되면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공익사업체의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중재에 의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봉쇄하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중재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2면으로 이어짐)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84년 유엔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7년만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결실이다.

멀리 뉴욕에서 채택된 낯선 이름의 문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길지 모르다. 그러나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란 고문방지 대책은 이미 96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했던 내용이었다. 선택의정서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당시 한국정부 대표단이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의 지연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며 국제기구의 권고를 완강히 거부하지만 않았던들, 오늘날 고문치사 사건은 일어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번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는 곡예였다. 결과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필두로 해 반대표를 던진 몇 나라에 끼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찬성표에 법무부의 입이 불거져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자신이 없는가? 그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금시설 의료실태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고집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국가인권위가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조사를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을 권고하고, 또 민간단체가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때,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의 연기가 피어날 틈이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문에 대한 비난과 재발방지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국제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춤거리지 말고 이를 비준하고, 구금장소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

#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or.kr>)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어제(10월 29일)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본인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날인'이라고 쓰여있는 칸에 지문 날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중략) 결국 저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채 훈련을 끝마쳤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

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군 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다며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서는 아마도 국방부의 지시 없이 일선

예비군업무 실무자에 의해 지문날인이 강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한 중대본부 관계자는 "총기탈취의 우려 때문에 지문날인을 실시했다"라며 "날인된 지문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없으며 총기탈취 등과 같이 총기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문을 날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은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하고 지급과정에서도 신분증으로 충분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윤현식 씨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 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최용희)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청소녀들은 (자기 고통에 대해) 말이라도 하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보육교사회(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몸담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인권문제에 눈뜬 서정은 선생은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서 선생은 99년 3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만5세의 유아들에게 총 12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아들이 눈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보육시설이에요. 여기서 하루 일정 시간을 할애해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교과목으로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육 자체가 인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돼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10여 년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온 한국보육교사회는 탁아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채울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고리를 '아이들의 권리'로 삼게되었다. 98년 '교사의 아동권리선언문'과 '아동권리강령'을 만들었고, 올해 여름에는 서울·경인 지역 보육교사 연수와 회원연수를 통해 유아와 교사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원리를 이해하려 했다.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을 통해 "놀라운 흡수력"을 경험한다는 서 선생은 "인권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생각을 조금만 조정하면 당신의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육 전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현장에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제한되기 쉽다. 또한 난해한 권리 개념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는 커다란 물음표다. 때로는 '용기'와 '돌파력'도 요구된다. 성평등에 관해 다들라치면 "왜 남자아이한테 물어도 된다고 하느냐? 왜 남자아이한테 00색을 입히느냐?"는 부모의 항의도 받아넘겨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현장 가운데 서있는 한국보육교사회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를 만드는 것,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의 인권을 도입하는 것, 아동의 참여 권리를 검증해 보는 것 등을 구상하고 있다. "아동과 '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19일(화)

제 22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 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근태, 김부겸, 송영길, 이부영, 임종석 등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사회단체들은 11월 26일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영)

##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지난 달 아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부아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재향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코트디부아르 공연단원 10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프리카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차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카 빌리지의 최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

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노엘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문제를 보도한 3대 방송사와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주장은 임금은 월 2백달러를 지급했지만 공연단 입국을 위해 소요한 경비와 숙식비를 포함하면 월1백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한 셈이며, 강제노역은 시킨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사관의 디오만데 곤도 시아바 문화상담 담당관은 18일 공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공연단원이 입국한 지난 6월 이후, 아프리카 빌리지를 방문해 물과 난방이 안 되는 생활환경, 2백달러밖에 안 되는 임금, 휴일이 없는 점 등 공연단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있음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중

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 사장은 고치겠다고 말하고서 아무 변화가 없었고 나중엔 대사관에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아바 담당관은 "사업주의 비인간적 대우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본국에 알려 (사업주를) 입국금지 시킬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공대위는 아프리카 빌리지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최저임금·강제노동·임금체불 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와 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B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서를 심사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노동조건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연예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셈"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12월 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 국제적 에이즈운동단체인 액트업(ACT UP)은 "전쟁에 쓸 돈을 에이즈에" 라는 슬로건을 갖고 10월 26일 국제반전행동의 날에 참가했다. 액트업은 반세계화 집회가 있었던 99년 시애틀, 2000년 제노바, 2002년 유럽사회포럼이 열린 피렌체에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라며 반세계화 행진에 결합했다.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이 단체가 '반세계화'와 '반자본주의 운동'에 결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침묵=죽음'이라는 모토를 걸고 뉴욕 맨하탄 동성애자 지역봉사센터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직접행동' 조직, 액트업은 에이즈 문제가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빈곤과 계층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집중돼있고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2천8백만 명이 몰려 있다. 또 계층적으로도 의료 접근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염율이 많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거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나 에이즈감염인모임(터프포워) 등의 투쟁을 통해 동성애자나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에이즈환자들에게 한해선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얼마 전 어엿한 종합일간지(세계일보)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마이크로 칩을 삽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발원한 것만 봐도 그 편견과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얼마 전 '구급시설 의료실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비조사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재소자를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무지 때문에 '결핵병동'에 구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알려졌다. 에이즈는 면역결핍이 문제가 되는 질병인데(병명을 보라!) 그런 환자를 결핵병동에 구금했다니! 그 재소자는 당연히 결핵에 감염됐고 병이 악화됐다.

에이즈는 B형간염보다도 감염성과 독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와 손만 잡아도 병이 옮는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 '더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한술 더 떠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또 한번 에이즈 환자들을 편견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얼마전 로마교황청은 '순결만이 질병예방에 최선책'이라는 전제 아래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황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교황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미 에이즈로 2천만 명이 사망했고 작년 한 해에만 3백만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2천8백만명의 남반구 환자들 중에 0.09%, 즉 약 2만7천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에이즈치료를 개발한 제약회사들이 고가의 약값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시장에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1. 경제적 처외법권 지역 탄생의 비극  
민변(11.11)·양대 노총 및 17개 사회단체(11.12), 법안 국회처리 반대/ 양대노총, 법안 통과 저지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11.13)/ 법안, 국회 통과...양대 노총 조합원 거센 항의(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어, 가락!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현의자 연행·조사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요청(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고문방지책 발표...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보장, 특조실 폐쇄 등 그러나 참고인 강제 구인 및 거짓진술 처벌 등 수사권 강화도 곁들여(11.15)

3. 제대로 된 연장 없이, 새 길 떠나야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신사실 확인권과 자료제출 거부 시 소명자료 요청권만 신설...청문회 및 위증죄 처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5. 기탁 :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상과 기출소 확대 건의 약속에 따라 단식농성 13일만에 종료(11.11)/ 10만여 농민,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참가...WTO 쌀 전면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저지(11.13)/ 이라크, 자국의 무장해제 요구 유엔 안보리의 새 무기사찰 결의안 무조건적 수용(11.13)/ 파들립당한 초등생, 유서 써 놓고 숨진 채 발견돼(11.14)/ 법률전문가 1백40명,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현재에 촉구(11.1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15)

최대의 이유이라는 것이 이들 제약회사가 고가의 약가를 고수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싼값의 일반약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실체다. 에이즈감염인과 환자들은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빈곤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병이 난 것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아니다. 병에 걸린 것은 이 미쳐버린 세계이고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힌 우리들이다. (변혜진 씨는 보건 의료단체연합의 기획부장입니다.) <알림> 이번 주부터 새 필자로 찾아뵙기로 했으나, 변동이 생겨 지난 4개월 간의 필자 중 변혜진 님의 글이 마지막으로 실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0일(수)

제 22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갖출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중 변호사는 기초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

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초발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

인가 △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이를 문제제기하면 마치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 같은 '자괴감'을 느껴 왔다"라며, "이동의 문제는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제정 확보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며, "이동권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2면으로 이어짐)

클릭! 인권정보자료

『형평운동의 재인식』

엮은이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비록 9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형평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로 기록하고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또 '형평운동이 8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건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사회운동'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형평운동의 정신, 운동전략, 일본 수평운동과의 연대 등 사회운동적 시각에서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형평운동이란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형평사'의 설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형평운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단지 백정만의 신분해방을 넘어 평등적 지향, 사회구조적 변혁, 민족적 연대를 담고 있었다. 당시 백정은 도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공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형평운동에 대한 재해석 작업은 우리에게 서구 중심의 근대적인 인권개념을 넘어 자생적인 인권투쟁의 역사로서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게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이에 대해 저자로 참여한 이안 니어리 씨는 "한국의 형평운동과 일본의 수평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아시아에서 인권개념 성립과정을 주시하며 동아시아의 인권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인권에 대한 연구문헌을 살찌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은아)

#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뺄죽'

최근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도입하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내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며 "교육여건, 재정 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희망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고,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요건상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2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재정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이 우선적으로 꼽는 찬성 이유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나 학생단체는 어떻게 생각할까?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학부모와 학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 좋지만, 지금의 교육제도에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보장하는 선택권이란 기부금,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보장된다"며 "결국 교육에서의 빈부격차가 더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조상신(고2) 씨도 "자립형 사립고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 진출을 불평등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립형 사립고제 찬성론자들이 근거로 드는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다양화'다. 그러나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교육전문 월간지 『우리교육』의 신수진 탐장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특성과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입시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다양한 학교 선택의 여지란 없다"고 말했다. 신 탐장은 "많은 사립학교들이 너도나도 자립형 사립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고,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박 국장은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공교육 속에서 실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각각에는 딱딱한 사람끼리 모여 교육받는 게 좋다는 생각과 성적이 좋은 나쁜 나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여 교육받는 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진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의 방향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주영]

(=>1면 '장애인' 기사에서 이어짐) 주장했다.

곽도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진 작진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강제권을 부여하는데 공감함을 표했다. (범용)

###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열린다. 30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남도 조치원 청소년 유스호텔에서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아래 대회)가 그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대회 준비모임은 제안 취지에서 "현재 특정 사안별로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은 없는 실정"이라며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 번째 순서는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는 전체토론이다. 발표를 원하는 모든 단체들이 짙막한 의견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준비모임은 "연대운동"을 바라보는 인권단체들 내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대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체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 토론에서는 93년 '비엔나 인권대회 공대위'부터 최근 활발해진 사안별 연대운동까지 지난 10년간 인권단체들 간에 시도됐던 다양한 연대운동의 성과와 오류, 앞으로의 방향이 논의된다.

저녁 시간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다양한 소주제별 운동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금까지 제안된 주제는 △사형폐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 △인권교육 △사회권운동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등이다. [이주영] □ 참가문의: 한국동성애자연합 (02-745-7942/김병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1일(목)  
제 22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후 근 3년만의 일이다.

1천7백15명의 희생자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1천4백73명, 행방불명 2백42명이다.

4·3 사건 희생자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사망 1만7백15명, 행방불명 3천1백71명, 후유장애 1백42명 등 모두 1만4천2백28명이다. 이날 결정된 1천7백15명 외에 남은 1만2천2백13명에 대한 심사도 뒤따르리라 기대된다. 제주 4·3연구소의 오승국 사무처장은 "이제까지는 4·3 사건 희생자들 다 폭도로 몰았었는데, 이번 결정은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명예회복이란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심사에서 우려되는 건 4·3 사건 당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이라며 "일부 위원들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사무처장은 "후유장애로 신고한 1백42명의 희생자 중 그동안 이미 6명이 돌아가셨다"며 "이 분들에게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주영]

##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혁혁'

###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버마 출신 민주화운동가가 투병 생활 속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버마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96년 한국에 온 르윈 씨다.

지난 해 4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르윈 씨는 매주 3번 씩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족도 없고, 병으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회당 20만원 가량 되는 치료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의사는 "원래 투석치료 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고, 혈액투석과 경제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르윈 씨는 외국인이라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0월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대한투석전문협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더이상 무료진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한투석전문협회에서도 혈액투석치료를 계속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건 부담된다고 이야기 해왔기 때문. 르윈 씨는 "2주전부터 매회 5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다"며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동료들이 진료비를 어렵사리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에 60여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민변 김기연 난민법률지원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르윈 씨를 조속히 난민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8년 '버마 민족민주동맹'을 결성해 활동해 온 르윈 씨는 지난해 5월 동료가 본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다른 민족민주동맹 회원들과 함께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의는 지난 9월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소속 17명

중 우선 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투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그전까지는 한국인들이 르윈 씨가 계속 버마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간사는 "르윈 씨의 동료들은 치료비 5만원 중 3만원은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치료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 국민은행 578601-01-059778  
예금주: 김기연(난민르윈) [이주영]

〈짧은 기사〉 화성의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21일 간 단식을 했던 이주노동자 비두와 표빌 씨가 21일 풀려났다. 일단 내년 1월 20일까지를 기한으로 보호일시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팔불출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가"라는 제목의 사실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인권위가 문을 열기 전인 오전 6시 30분 경부터 진정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어 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렸다"고 입을 모았던 힘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에게 오늘의 사태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 입법과정의 '합의'는 온데간데

"원래대로 하면 헌법에 근거규정을 둔 기관이어야 마땅하나, 국가인권위 만든다고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했다. 법무부가 트집 잡았으나 취지대로 통과되었다. 입법과정의 합의를 지켜가야지, 시비를 걸면 되는가. 이럴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행사부에 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상희(전국대 법학) 교수는 이번 사건을 "입법자의 입법의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한다.

입법과정을 소상히 지켜본 인권활동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당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간사)씨는 "헌법기관이 아니면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 가능한가"라는 법무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에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권력기구와 관료들의 방해에 의해 축소된 권한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합의된 원칙마저 파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인권위가 소속 없는 국가기관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반증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위 길들이기와 자기 밀로의 편입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갈

은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일 수 있다. 이런 모순, 즉 국가인권기구가 판단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의 조직적 연결고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인권위는 방송위원회나 특별검사제 등과 같이 그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될 것이다.

## 왜 '독립성'인가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해 민간기구화 할 것을 제의했으나 위원회쪽 관계자들이 '국' 국가기구가 되기를 원했다. 국가기구로서 예산과 지위는 갖고 통제는 안받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 청와대와 행사부의 인식수준이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권활동가 최재훈(국제민주연대, 2000년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단식농성단 단장)씨는 "유엔이 제시한 '파리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독립성 확보였다. 법무부의 '민간특수법인' 대 인권단체의 '독립된 국가기구' 논쟁에서 국가기구로의 귀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돈도 받고 통제도 받겠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그런 발상은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파리원칙'이란 92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

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장했던 것은 법무부 산하의 민간기구였고, 술한 인권침해가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 식구 싸주기' 관행의 되풀이를 염려한 인권단체들의 '독립된 국가기구' 요구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위 설립과정을 밀착취재했던 김창석 기자(한겨레 21, 당시 한겨레신문)는 "설립논의에서 독립성은 핵심이었고, 헌법기관으로 인권위를 설치한 남아공을 부러워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한 우리 상황에서 법무부가 주장한 민간법인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한다는 건 넌센스였다"고 회고한다.

## '독립성' 논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인권위는 국내법상 헌법기구가 아니지만 가장 '헌법적'인 기관이다. 헌법의 국가관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의 구조라는 것도 이 목적을 위해 나오는 것이다. 어느 국가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국가인권위"가 어떤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민주권이나 헌법정신을 거스르는가? 행정절차를 둘러싼 사소한 해프닝을 황재처럼 여기고 '무지'와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관계기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속 없는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국민의 시선에 아픔을 느끼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관계부처의 호의란 애초 기대할 바가 아니었기에 국민의 지지 속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국민이 '우리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인권위의 진정한 독립성과 제도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2일(금)

제 22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 각계 분노·저항, "소과 전면 개정 필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도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단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관제병·운전병·지휘관 모두가 사고차량의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수신호로 위협을 알린 점, 통신장비에 이상이 없었고 관제병 니노가 두 여중생을 봤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 관제병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시작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그 또한 무죄 평결이 내려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여중생 사망사건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끝나게 된다.

이에 21일 재판이 열리는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에서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홍근수) 주관 아래 하루종일 미군재판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또 사회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쏟아졌다.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는 성명을 내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은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 축소하고 나아가 미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주권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과 동시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과협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등 9개 사회단체도 공동성명에서 "불평등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과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과 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미국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투입사건의 재판과정, 연이은 주한미군부대의 기름 유출 오염사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불평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 오두회 공동 집행위원장은 "정치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걸치레식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소과 개정 투쟁을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모두 입장을 내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소과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주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사건번호 '속행 다 2002노9958'. 21일 아침 10시 30분께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 한 젊은이가 섰다. 인터넷에 북조선의 주장이 담긴 글 등을 올리거나 연동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7월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9월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아무개 씨다.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기동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쪽과 3년형을 주장하는 검찰 쪽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후 김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에 나선 박창수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주체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는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자료를 탐독하긴 했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질서를 해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론이 끝나자 김 판사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주체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86년 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던 김씨는 대학시절부터 주체사상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김씨가 대학에 다니던 80년대 중반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 박 변호사의 답변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 판사에 의해 가로막혔

다. 김 판사는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주체사상·이북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며, 김씨에 대한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은 김씨의 짝막한 진술로 끝을 맺었다. 김씨는 "인터넷의 특성상 쌍방향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선전·선동이나 찬양은 어렵다"라며, "네티즌들은 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조선 관련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찬

양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김씨의 선고일은 다음달 3일. 김씨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단지 북조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는 벌써 4개월이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검찰의 주장이나 1심 판결처럼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만한 행위였는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리학도가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지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판사의 인권의식 속에서, 이 사회는 '북조선은 악, 남한은 선'이라는 뚜렷한 경계에 의해 폭력적으로 나뉘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북조선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너무도 쉽게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한다는 사실을 이날 320호 법정은 또 한번 보여주고 있었다. (범용)

###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해 권고

####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도시철도공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리프트 보완대책은 리프트의 안전성 검사와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이 강구해야 할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도시철도공사장은 "발산역 사고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대해서 책임을 묻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발산역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번 인권위의 합의권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것"이라며 거부,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법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용)

###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 때 : 2002. 11. 30 ~ 12. 1
- ▷ 곳 : 조지워싱턴소년유스호스텔
- ▷ 세부행사
  - 대주제토론
  - 인권단체 연대운동 평가·전망
  - 소주제토론
  -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운동사회 기부장성, 인권교육, 인터넷 검열, 군 인권 문제 등
- ▷문의: 02-745-7942
- 한국동성애자연합 김병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3일(토)

제 22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 학수사와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자형을 보관관리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전자 정보은행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94년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놓았고 98년에는 경찰과 서로 경쟁적으로 유전자은행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을 끌어들이며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킹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시스템을 검증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먼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은행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보호하고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검찰 쪽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씨는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확대해석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으로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축적된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를 분석하고 이후 일반적인 범죄자들에게까지 유전자은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배 간사도 "유전자은행의 시작은 미아나 범죄자지만 지문날인처럼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 유전자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비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국장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희)

###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계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의를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태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 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디 우리뿐이라. 미국의 오만은 전세계를 자기 안방으로 삼고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물을 끼얹고 위상을 무력화하는데 갖은 책략을 발휘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서명을 철회한데 이어 각국에게 자국민에 대한 로마규정 기소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이 각 나라들과 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국은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도 이미 지난 7월 기소면책특권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어, 미군범죄에 대한 지금의 불평등한 재판관할권을 강화시켜 가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살인'의 공범이 되자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전 동참과 지원 요청은 살인에 대한 강요일 뿐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소파 개정과 재판권 이양, 면책특권협정 거부, 미국의 살인 전쟁 거부'를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영혼에게 우리가 바칠 것은 '정의' 뿐이기 때문이다.

# 전세보증금 때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 토론... "재산의 소득환산을 낮춰야"

중소도시에 사는 김 씨는 아이들이 넷이다. 보증금이 3천5백만원인 전세 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은행에는 4백90만원의 돈이 저금돼 있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일을 해 월 백만원을 번다. 이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김 씨 가구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 올해 6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27만원. 이 가구의 재산이 32만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못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은행에 있는 돈과 전세보증금이 털어 살자니 빈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제란?

일정한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액수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월) : 4.17% (일반재산), 6.26% (금융재산), 100% (10년 미만의 승용차 가격)

○기본재산 : 일반재산 - 3천3백만원 (대도시), 3천만원 (중소도시), 2천9백만원 (농어촌) / 금융재산 - 3백만원

○생계급여=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래 2003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보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여전히 최저생계 수준 아래서 살아가는 다수 사람들을 제도 밖으로 방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중보위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고, 기본재산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많은 빈민들이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소액의 저축이나 전세돈을 털어 써야 하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에 결국 빈곤 탈출은 영영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 소장은 "가족 수에 상관없이 기본재산 면제액이 똑같아서 가족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수급권자가 되기 어렵거나 혹은 되더라도 급여가 더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승용차에 대해 연간 1,200%의 높은 환산율을 적용한 것도,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까지 탈락시키기 때문에 문

제"라며 "승용차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의심스러우면 정밀 재산 조사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류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달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예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규모를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생활수준 및 최저생계수준을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는 3백7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직전인 2000년 9월에 154만명이던 수급자의 수는 2001년 말 149만명, 2002년 9월까지 136만명으로 계속 줄었다.

민간대표 중 한명으로 소득인정액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소득환산율이 너무 높다는 데 동의하며 "논의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론했다. △승용차 소득환산율 적용조항을 없애고 정밀 재산조사로 대체하는 것이나 △기본재산 면제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허교수는 "소득기준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인정제도를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작성, 보건복지부 및 중보위 등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주영)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후보자 선정의 원칙으로 "후보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통해 국제적 인권문제에 정통하고 그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후보자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인권단체 및 법률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해 적임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이후, 정부는 선정된 후보의 신상과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6일(화)

제 22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가혹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실은 빠져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5년 이하, 불법체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진정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주기가 일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처부심사권 및 진술거부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에서 7항까지의 신체의 자유권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장

<알림>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삼일활동가)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 김해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체포관행과 신체자유권 침해가 결국 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홍 검사 등 피진정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선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며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에 체차레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그런 관행이 없었다고 이를 거부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진정인과 참고인을 동반한 현장 실지조사를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 제도적 방안 토론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장경욱 변호사 등 발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 신동운 위원은 "지금도 형사소송법 제48조 5항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관행에 쫓겨 잘 활용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잡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빼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변호인 입회권을 주장하면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한편,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주영)

##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25일 아침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관 이양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배심원들마저 피고인들의 동료로 구성된 미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재개정 없이는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을 거쳤으나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미군당국이 운전병과 관제병을 전격 기소할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아침 대학생 20여명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시설 내 부로 화염병 10여개를 던지는 등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주영)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1965년대 월남전을 배경으로 다룬 '위위솔저스(we war soldier's)'라는 영화에서 할 무어로 분한 뱀 김스는 '전쟁이 뭐야'라는 딸의 물음에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답해 준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집단학살, 대량학살로만 알고 있었던 massacre라는 단어도 군사용어로는 전멸, 몰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massacre가 집단학살뿐 아니라 전멸이라는 동의어로 쓰여지다니 그렇다면 집단학살은 곧 몰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말은 인권으로 빚대어 본다면 '집단학살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른바 정황론을 음모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 같아 끔찍하게 된 것이다.

50여 년 전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 땅은 집단학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에 다름 아닌 상황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의 1/20인 100만명이라는 무수한 인명이 집단학살을 당하였던 것이다.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의 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는 태연하게 5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소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데에 대하여는 민족사회 전반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검과 시체를 온적막강산에 유기하여 버려둔 채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요 위선인 것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대량학살이라는 죽음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라면 우리는 인권을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권운동은 국가 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푸는 길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여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기능적이거나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풀릴 듯 풀릴 듯 쫓겨 풀리지 않는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민간인학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은 아니듯, 모든 인권운동단체들이 인권문제로 인식을 같이하고 나서야만 비로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이다.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1. 여중생 사망사건 책임, 장갑차에 물으려요?

미8군군사법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판결(11.20)/ 여중생 범대위, 동두천 캠프케이지 앞 재판 무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판결(11.22)/ 여중생 범대위, 용산 전쟁기념관 앞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대회' 열고 미8군 사령부 진입 시도(11.23)/ 민변,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 재개정 협상 즉각 시작 촉구 성명 발표(11.25)

2. 노동자의 고난, 그리고 죽음

양대 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11.18)/ 부산시 공무원 파업 관련 인사위 징계, 노조 반발로 무산(11.18)/ 경기도, 인사위 열어 행사부장관실 점거 농성 노조원 해임 결정(11.18)/ 인천 경인운수 노조원 천덕명씨,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분신 사망(11.22)

3. 이라크전은 이미 진행 중?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 이라크 입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 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영국, 이라크 방공 레이더 공습(11.21)

4. 이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서울시에 손해배상 권고(11.18)/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열어(11.19)

5. 기타 : 인권위원장 등 국외출장 관련 '사전승인 없었다'는 이유 청와대 공개경고...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위라 반발(11.18)/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사업주의 자국민 공연단원 인권침해 사실 진술(11.18)/ 정부,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1천7백15명 첫 결정(11.20)/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불교인권위가 주는 불교인권상 받아(11.20)/ 검찰,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의사 밝혀 인권침해 우려(1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촉구(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3년 미만 체류자 10만7천명 출국 1년 유예(11.22)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7일(수)

제 22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사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2천2백여 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간접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정이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와 야유회 등도 업무와 관련된 일인만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성희롱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신체접촉 등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자 이외에 성희롱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도 성희롱 피

해자로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사회 직책 이상의 간부가 주관한 회식에서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배인이 주관한 회식에서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지배인이고, 오히려 피해도 상시적인데 이들과 관련된 성희롱에 대해 회사책임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롯데호텔 노동조합 이남경 고문은 "이번 판결은 여성 노동자 앞에서 포르노사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회사는 사내에서 노조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포르노사이트를 본 것에 대해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 냈다.

롯데호텔 성희롱대책위원회 박정자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회사는 책임을 져야하고,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직장 내 광범위한 성희롱을 근절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회사에 유감을 느낀다"며 "회사는 성희롱을 인정한 노동청의 조사도 무시하고 1심 재판까지 보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회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가 지켜볼 차례"라고 강조했다. (고근예)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International Human Rights)
펴낸 곳 : 오름 / 지은이 : 책 도넬리 번역 ; 박정원 / 펴낸 날 2002. 8월 / 341쪽
국제정치에서 '인권'이 역사적으로 주권국가와 국제질서에 미친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 번역서가 출간됐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권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관계의 변화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군부정권의 출현으로 이들 나라는 고문·실종 등의 인권침해가 극심했으나, 민간정부가 등장한 후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인권이 국제적 개입으로 변화한 사례로서 중국 천안문 사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좀더 인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 제국주의적인 면모나 이중적 잣대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주의적 시각을 책 구석구석에 노정하고 있다. (최은아)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양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침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김대중 대통령에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준)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을 저지시키고 궁극적으로 법률을 폐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국민대책위는 앞으로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 위헌 소송,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중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기해 악법의 폐해를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각 부문의 비난도 쏟아졌다. 노동장애인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2% 고용의무를 면제해 70% 이상이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

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30여개 환경 관련 법률이 무력화되면 이 땅이 어찌되겠냐"며 "재앙은 '경제자유

구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약국과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는 등 의료보장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길목인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대표자들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만담했다. (이주영)

### 네번째 반딧불이 <붉은 대기>

12월 7일(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네번째 반딧불(정기상영회)이 불을 밝힌다. 상영될 작품은 <붉은 대기>. 연세대 오세철 교수님이 보내는 <붉은 대기> 감상문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주)

1967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977년까지의 세계혁명을 말하려는 이 기록영화는 혁명과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엮어 편집했다. 카스트로의 연설, 체 게바라의 육성, 아옌데의 연설 등 혁명전사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는 즐거움 또한 크다. 프랑스 좌파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세계혁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또한 지니고 있다. 제1부는 베트남전을 중심으로 제2부는 소련 침공에 대한 프라하의 저항을 중심으로 유럽 신좌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스페인 내전을 실패한 운동으로 보는 반면 베트남 전쟁은 세계모순의 집중점으로서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평가한다. 유럽의 학생운동과 노동자파업, 남미의 식민지해방혁명, 미국의 반전시위 등 전세계적 혁명투쟁이 문화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부의 제목인 '연약한 손'은 학생운동의 한계를 의미하며 그것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려 했던 한계를 보여준다. 남미에서의 무장투쟁이 제도권 공산당에 의해 무력화되고 선거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은 신좌파가 지니고 있는 혁명성, 무정부주의적 과격성과 대조돼 혁명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2부에선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소련침공에 대한 체코공산당의 결정에 대한 찬반견해를 다루면서 반대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스탈린주의를 지역성·역사성·민족성을 뛰어넘는 영원한 위협으로 보며 국가와 당의 몰신성을 뛰어넘는 대중의 참여와 투쟁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스탈린주의보다는 마오주의에 친화적인 프랑스 좌파의 단면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권력억압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로 환경오염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77년 이후의 문제로 현실사회주의 몰락, 레이거노믹스, 에이즈 등을 끝 부분에 보완하기도 하였다. 세시간에 걸친 진귀한 기록의 모음이기도 하지만 제작자가 프랑스 신좌파의 안목에 갇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혁명과 학생운동 그리고 반제국주의 투쟁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세계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혁명의 주체가 억압·착취당하는 전세계 노동계급이라는 사실, 그들의 혁명적 실천이 일국사회주의혁명을 넘어선 세계혁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문화혁명이 아닌 총체적 혁명으로, 학생운동이 아닌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90년대 이후 생생한 기록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신좌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를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혁명적 실천을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8일(목)  
제 22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서울에서 부천으로 접어들자마자, 낡은 집과 시커멓게 타 내려앉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 을씨년스런 동네가 펼쳐진다. 5분마다 한번 씩 전기줄에 닿을 듯 낮게 지나가는 김포행 항공기들의 굉음에 타지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부천시 고강동, 이른바 '오쇠동'이라 불리는 동네다.

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지난 92년 공항시설구역으로 지정돼 곧 공항확장공사가 시작될 이 곳에도 여전히 사람은 살고 있다. 96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 주민은 보상비를 받고 이주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 110여 가구가 아직 남아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야지." 세입자 오명숙 씨가 내뱉은 첫 마디다. 지난 25일 일어난 화재사건은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날 새벽 이 동네 조모씨 집에서 조씨 부부가 신문배달을 나간 사이 불이 나 잠 자던 4남매가 모두 죽은 것이다. 만이가 겨우 9살이었다. "여기서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요. 어린이들이 불 속에서 죽었다니..." 오 씨는 말을 잇지 못한다.

세입자들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것이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이 지역에 불이 37번(부천소방서 자료)이나 났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풀린다. 세입자대책위의 이영기 부위원장장은 "대부분 불은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고 난 며칠 후에 일어났다"며 "이번에도 같은 건물의 다른 가족이 불 나기 이를 전에 이사갔는데, 빈집인 줄 알고 불을 놓았을 것"이라고 추

측했다. 오 씨는 "무섭게 해서 (여기서) 나가라고 자꾸 불을 놓는 거겠지"라며 수많은 화재가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세입자 신순례 씨는 "이제껏 수없이 불이 나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사람까지 죽게 된 것 아니냐"며 "실화든 방화든 화재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텐데..."라며 한숨을 쉰다.

어른들도 무서운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10살먹은 전모 어린이는 "(죽은) 그애들이 꿈에 나왔어요"라고 말한다. 11살짜리 최모 어린이는 "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가죠"라고 말한다.

92년 이곳이 공항시설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 세입자들에게는 이주대책비로 4백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한다. 오 씨는 "다른 데 가서, 보증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말한다. 오 씨네는 6만원짜리 사글세방에 살고 있었다. 남아있는 다른 집들도 이형기 씨네가 사글세 10만원, 유정숙 씨네가 4백50만원짜리 전세집 등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천시청이 제시한 임대주택마도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23만원인 24평형의 중산층용으로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세입자들은 부천시청과 항공청에 보증금 1천여만원, 임대료 15만원 내외로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18평형 미만의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일까?

한편, 네 어린이의 죽음과 관련 부천YMCA, 부천여성회전화 등 지역단체들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주영)

###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 제1차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규탄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엔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7백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시국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격양된 목소리로 미군 재판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와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내달 2일 '반미투쟁단'을 이끌고 미국에 갈 예정인 한상열(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목사는 "오만방자한 미국을 용납해선 안된다"며 "백악관에다 우리 뜻이 담긴 13만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부시의 공개사과와 재판권 이양, 소파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 10대 행동지침'도 발표했다. △매일 저녁 6시 규탄집회 전국 동시다발 개최(서울 : 종각 국제청 앞) △매주 목요일 정오 차랑 항의 경적 30초 △각급 학교에서 매주 목요일 항의와 규탄을 내용으로 수업 진행 △스타커·배지·리본 달기 등이 그 내용이다. 거리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매일 저녁 10시와 정오에 백악관, 미국방부, 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등에서의 사이버 시위와 각 정당에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가 제안됐다. (고근예)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인권경시에 경중...성과는 미흡"(세계일보)  
 "약자의 인권 보호 물꼬는 뚝다"(문화일보)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미친 성과"(대한매일)  
 "인권위, 성과보단 실망 컸다"(한겨레)  
 "권위주의, 관료화, 폐쇄성, 비전문성...인  
 권 비판에 부딪힌 인권위"(오마이뉴스)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언론사는 앞다퉀 인권위 활동 1년을 돌아보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 "인권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진정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의 미흡, 폐쇄적인 조직운영, 현장 지향 노력의 소홀" 등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 여타 국가기관의 견제" 등은 인권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권단체들 언론이든 "당초 기대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총론적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권위의 분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인권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실마리를 찾아본다.

### 부품 기대...몰려드는 진정인들

2001년 11월 26일, 광화문에 마련된 인권위의 임시사무실은 인권피해를 호소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잠사진을 이뤘다. 제천시 장애인 임용차별사건(접수 1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도소 종교활동금지 관행(접수 2호) 등 이날 하루 동안 접수된 진정 건수만 모두 122건. 2002년 10월말까지의 진정 건수는 모두 2천9백7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9건에 이르는 진정 현황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 전체 진정 가운데 1702건, 즉 절반이 넘는 사건이 미해결된 상황이며, 그나마 구제가 결정된 사건은 28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무처 구성 지연과 통합적 정보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간 소요"를 원인으로 제시하며, "점점 사건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각하 처리된 사건이 많았다(처리건수 대비 89%)"며 "현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욕적 출발

2001년 11월 국정원의 느닷없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부를 만큼, '인권후퇴'를 예상하는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은 고조됐다. 그러나, 인권위에겐 거꾸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입법예고 이후 2001년 11월 30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의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7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위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2002년 2월 20일 공식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4월 4일엔 인권위원장이

직접 국회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정책적 역할을 십분 발휘한 의욕적 활동이었으며, 인권위는 스스로 향후의 활동방향을 제시한 사례였다.

인권위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구급시설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2001년 12월 3일 구급시설에 대한 첫 방문과 면진 진정을 실시한 이래,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구급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전체 진정건수 가운데 30%가 구급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듯, 구급시설의 수용자들은 인권위의 가장 많은 '의뢰인'들이다. 구급시설 인권의 개선이 인권위의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늦어진 체제정비...그러나, 시작부터 방향착오

타 부처의 견제 속에서 지지부진했던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은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됐다. 1월 30일 총 215명의 정원을 확정하는 직제령이 통과됐고, 예산 192억원이 결정됐다. 이어 2월 5일 시행령의 통과, 2월 19일 사무총장 임명, 3월 29일 1차 직원선발, 4월 1일 사무처 공식 출범을 통해 인권위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권위는 중대한 방향착오의 우를 범하기 시작했다. 올 2월 28일 열린 인권위의 전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외부인에게 공개됐으나, 논의안건에 대한 방청을 제한하면서 인권위는 스스로 폐쇄적 운영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사무처 직원 1차 채용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마저 불거져, 초기부터 인권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인권위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권위 출발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인권위는 지금까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다음 면에서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면에서 계속)

### 인권단체의 공개 비판에 귀 막은 인권위

올 4월 30일 25개 인권단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최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아껴왔던 비판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진정 처리에 있어 소극적 자세와 운영의 폐쇄성, 관료화 등 현재 인권위를 향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이미 4월 30일 토론회에서 모두 토로됐던 내용들이다. 이어 20개 인권단체들은 5월 21일 인권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6월 11일 인권위로부터 돌아온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투의 관료적 답변이었고, 결과적으로 6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의 협력거부 선언이 등장하게 된다.

인권위는 총 15회에 걸쳐 139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도모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비판적 문제제기'엔 '판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간의 공간 빼먹듯 필요할 때만 인권단체들의 역량을 빌리면서도, '쓴소리'엔 계속 귀를 막고 있는 한, 인권단체들과 인권위 사이의 깔려있는 관계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권고...

그러나, 방향이 안 보인다

올 한해 인권위가 권고를 내린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권고(아동권) △전시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표현의 자유)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개인정보 보호)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자유권 일반) △산업연수생 단계적 폐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월드컵 기간 집회자유보호 권고(집회의 자유) △유치장 알몸수색 인권침해 결정(피의자 인권) △진주교도소 환자 형집행정지 건의(수용자 인권) △중국인동포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 손해배상권고(장애인 인권) △제천시 임용차별 시정권고(장애인 인권) △교도소 내 소수종교 집회 허용권고(종교의 자유) △대학신입생 연령차별 시정 권고(나이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위가 관심을 기울여 온 점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활동의 주요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보

안관찰법 등 길게는 50여 년, 짧게는 십수년간 수많은 인권피해자를 양산해 온 대표적인 반인권법령들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해결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노동·주거·건강권 등 사회권 영역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방향이 무엇인지, 현재의 인권위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은 인력과 제한된 권한 아래서, 인권위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와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인권위의 '장기활동전략'과 '청사진'이다.

### 인권단체들의 대응

인권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언론사마다 나름대로 인권위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를 냈던 반면, 정작 인권운동 진영에서 별다른 평가도, 요구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인권위를 적극 감시·견인·비판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은 인권단체들에게도, 인권위에게도 '위기적 상황'이다. 이는 3년여에 걸친 험겨운 투쟁 끝에 인권위를 건설했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찾아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다산인권센터가 발표한 26일자 논평에 주목해 보자. 다산인권센터는 "인권단체들도 이제 국가인권위를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그리고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적극대응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다산인권센터의 입장은 현 시기 가장 주목할만한 입장이다.

한편,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서는 다양한 소주제토론 가운데 하나로 '국가인권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태당이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공동모색이 이곳으로부터 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조)

##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 때 : 2002. 11. 30 (토) ~ 12. 1 (일)
- ▷ 곳 : 조치원청소년수련원 (041-862-3332)
- ▷ 행사 개요
  - 전체토론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 소주제토론
    - 국가인권위 대응
    - 인권교육의 전략
    -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연대
    - 운동사회 가부장성 문제
    - 과거청산의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운동
    - 사회권운동의 전략
    -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문제
    -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형사소송절차와 인권)

▷ 문의: 02-745-7942 한국동성애자연합 김병석

#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개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설문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 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lian.net)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설문접수는 12월 3일(화)까지이며, 이번 설문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 노동

- ( ) 1. 발전노조 파업참가 노동자, 회사 복귀 후 서약서 강요·노조활동 방해 등 인권침해에 시달려
- ( ) 2.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근골격계 질환 판정 ... 회사측, 직업병 규모 축소·은폐하기 위해 간간함
- ( ) 3. 노역 중 재해 입은 공익근무요원, 오랜 법정 싸움 끝 승소판결 얻어
- ( ) 4. 월드컵을 맞아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 ) 5. 위험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파업
- (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빈곤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끊어
- ( ) 10.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 ) 11. 국내 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활발
- ( ) 12. 대전 용두동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 피의자의 권리

- (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 표현의 자유

- ( ) 15.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찾아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 프라이버시

- (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며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취 불응' 조항 위헌제정
- ( ) 19. 경찰, 노동자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 양심의 자유

- (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 ) 22. 헌법재판소,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합헌 결정

## 국가보안법

- ( ) 23. 정부 승인 받고 방북했던 범민련 인사, 전원 국가보안법 상 유죄판결
- ( ) 24. 사회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에 동참 ... '범사회인대책위' 발족
- ( ) 25.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린 민주노동당 김강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 ( ) 26.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기소
- ( ) 27.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2)

## 집회의 자유

- ( ) 28. 월드컵 이유 1인 시위 등 집회의 자유 제한
- (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 여성·청소년·장애인

- ( ) 32.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여성 14명 사망...서울지법,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국가 배상 판결
- ( ) 33.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내
- ( ) 3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일어 ... 서울행정법원,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한 제청
- ( ) 35.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 나와
- ( ) 36.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 ( ) 37.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인권위 접거 농성 ... 저상버스 도입 추진 약속 받아
- ( ) 38. 시설 미비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 국가인권위

- (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 감옥 수용자의 인권

- (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재소자 의료권 사회문제화 ...서울구치소 조순원 씨(1/7),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4/24), 청주교도소 김해자 씨(3/23)
- (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 ) 42. 서울지법 제7민사부,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은 위법' 판결
- ( ) 43.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 ) 44. 유엔, 국제조사단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가능케 하는 교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 ) 45.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회보호법 폐지·처우개선 요구하며 집단 단식

## 시설수용자의 인권

- ( ) 46.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수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폭행 인정/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 안 해

## 과거청산/불처벌

- ( ) 47.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운동 시작돼...'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
- ( ) 4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전국단위 첫 희생자 유족증언 대회 열어
- ( ) 49.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허원근·소위 인혁당 사건·녹화사업 등 의문의 죽음 관련 진실규명
- ( ) 50. 정부,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국가 차원 명예회복 물꼬
- ( ) 51. 한국,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대열에 합류 ...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규정 공식 발효

## 탈북자와 인권

- ( ) 52. 탈북자,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진입 행렬 잇따라

## 테러방지법

- ( ) 53.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입법 저지

## 신자유주의와 인권

- ( ) 54. 민영화 반대 운동 ...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돌입
- ( ) 55. 농민, 정부의 WTO 쌀 수입 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한 반대 운동 거세
- ( ) 56. 인권차취특구,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규제 면제

## 미국과 인권

- ( ) 57. 국내사회단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책동 중단 등 반전시위
- ( ) 58.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재확인

## 기타 ( )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29일(금)  
제 22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8일 허일병이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규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들은 외면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허일병이 타살됐다는 의문사위의 결론을 정면 부정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새벽 2시~4시 사이 노모 중사가 오발로 쏜 총탄에 처음 맞았고 이후 아침 10시~11시 사이 폐유류고로 옮겨져 누군가가 쏜 두발의 총탄을 맞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은 중대본부 옆 폐유류고에서 10시경부터 1시간에 걸쳐 자신의 M16 소총으로 양쪽가슴과 머리에 총 세 발을 쏘고 자살했다며 그 근거로 "사고 당일 오전, 중대본부 요원 및 소초원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일과는 정상적이었으며, 사건 당일 10시~11시 사이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국방부는 "의문사위가 현장검증을 조작했고 강압조사와 유도신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낮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특조단의 공언과는 달리, 이해관계자인 중대본부 요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자살'이라는 과거 군 헌병대의 결론을 되풀이했다"며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문사위는 국방부의 결론대로라면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혹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문사위는 "과거 헌병대 수사기록에도 참고인들이 10시에서 11시 사이 두 발의 총성을 들은 것으로 돼있는데, 국방부는 '확인해보니 3발이 청취된 것'이었다고 어설피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검증조서나 수사관이 작성한 인지보고, 수사계획서 등에 모두 폐유류고 현장에서 2발의 탄피가 발견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부는 다음날 찾은 탄피 1발을 실수로 그려 넣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

다"며 "이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폐유류고 현장을 찍은 사진엔 삐조각이나 너조각이 나타나있지 않아 사체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국방부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가슴에 한발 총격을 당하면 행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피문은 탄피를 스스로 풀고 다시 총을 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내년 초 조사가 재개되면 국방부 특조단이 제기한 문제점까지 겸허히 수용해 허일병 사건의 실체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일병 사건은 군수사제도, 검시제도, 부검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은 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추가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해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5일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홍모 씨가 항소를 하자, 국가보안법 제13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주영]

## 집회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이 노동사무소 앞 집회에 참가 중이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서미숙 씨는 "집회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노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노동사

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몸을 바짝 들이대고 미는 척하면서 내 가슴을 왼손으로 3~4차례 반복해 눌렀다"고 말했다. 서 사무국장은 "심한 굴욕감에 '당신 지금 내 가슴 만졌어?'라고 항의했는데, 그는 '밀었지 언제 만졌냐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서 씨에 따르면, 이후 계속 항의를 하자 경찰 네다섯명이 서 씨의 뒤에서 옷을 잡고 심하게 끌어 3분 가량 목이 짓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겪

었다고 한다. 서 씨는 "구토를 하고 곧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경찰은 15분 가량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낮 12시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과 서 씨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전주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전북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전북본부 등은 28일 전주노동사무소장을 만나, 사무소 직원의 성추행에 대해 책임있는 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전주중부경찰서에 노동사무소 직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주영]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올해 10월 안산 YMCA에서 펴낸 아동인권을 위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3년 전부터 YMCA 전국 각지 지부에 '아동인권센터'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문을 열 때는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센터는 대전, 시흥, 이천, 춘천 등 전국적으로 10여 개 지역 YMCA에 동지를 들고 있다.

그 첫발을 내디딘 안산 YMCA의 박성희 간사는 "어린이 관련 교육·문화 운동을 개척해온 YMCA가 아이들의 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아이들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았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 그래서 아동인권교육의 출발과 강조점을 아동이 자신의 소중함과 자기 삶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안산 YMCA는 지역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인권교육, 방과 후 학교, 겨울 인권캠프를 통해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을 만나왔다. 그중에서도 1년간 지속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이 대부분인 인권교육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자기표현'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권리'로 나아가는 주제별 교육이 주 1회 1년간 이어지면서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를 눈에 띄게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학부모 교육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엄마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지도법, 체벌과 가정 내 학대문제 등을 다뤘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별일 아는데 아이를 미워했구나'라며 자기 아이와의 관계에 새롭게 눈을 뿐 아니라 아동인권교육에 직접 나서게도 되었다. 현재 안산 YMCA는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아동인권 문제에 연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준비중이다. 올해는 그 밑작업으로 '지역 사회복지사 의식조사'를 하기도 했다.

"아동인권이란 걸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인권침해 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걸 애들에게 가르치느냐?"고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인권이라는 말에 지레 겁내하는 어른들과 부딪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박성희 간사는 "아이들이 아무리 변해도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1월 30일(토)  
제 22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아들이 죽은지 18년이 지난 지금, 슬픔과 애달픔이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는 국방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내 자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지느냐 아니냐보다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소원이다. 마음 놓고 군대에 갈 수 있는 나라, 죽음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28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자살'결과 발표에 대한 질타가 녹아있었다.

29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9개 인권사회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국방부 특조단 발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조사의 초점은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의문사위의 조사를 반박하는데 맞춰져 있었다"며 "국방부가 '의문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도 안되고, 조사하더라도 특조단의 조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학 신부(천주교인권위)는 "군대 내 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에서는 하나같이 '소심한 성격, 여성문제, 돈 문제, 군 생활에 대한 염증에 의한 자살'이라 한다"며 "군대 내 문제에 대한

자성, 폭력문화에 대한 각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성실하지도 겸허하지도 않은 국방부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메

울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군의 명예만을 줄곧 외쳤지만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이다. 지금도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전쟁이 없어도 연평균 5백여명이 죽어간다. 군사단체가 수사지휘를 맡는 체계에서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다. [류은숙]

###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나라도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대의 악법의 존재함에 우리는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이자 민족통일을 함께 논의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따를 것을 약속하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적단체' 규정은 대학생회의 대표로 뽑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공안기관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내심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고약스런 이 법은 인터넷 상의 토론까지 잡아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인권성에 더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정상회담,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이 무르익었고,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호소를 비롯해 변호사·교수·성직자·학생 등 각계각층의 농성과 시위가 몰아쳤다. 인권활동가들은 20년만의 폭력과 추위 속에서 노상단식농성을 감행하면서 "가라, 국가보안법"을 외쳤다. 그러나 군사 독재정권의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쇄에 손도 대지 못했다.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 정쟁속에 황금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었던 김 대통령의 초라한 말로는 인권을 배신한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의 제한이나 오남용의 제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반인권성'을 본질로 하는 법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그대들의 구호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직시하라. '인권의 성찬'은 말로써 충분히 맛본 김대중 정권 5년이었다. '말'으로써가 아니라 진짜 인권의 '맛'을 보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고 실천하라.

#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 흐름과 쟁점

### 1. 고문의 망령은 계속되고 있다...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부각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천훈 씨가 고문을 받다 죽은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던 10월 26일 사망한 조천훈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0. 28) 대검은 직접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기소하는데 이어 홍경령 주임검사를 고문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시켰다. (10. 30~11. 6) 대검감찰부는 조씨 등 공범 혐의자들이 불고문을 당한 사실도 확인해,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11. 13)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과 밤샘수사·밀실수사 등이 가혹행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강제구인제 등도 도입하기로 해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 (11. 15)

### 2. 여중생 사건 무죄 판결,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11. 20/11. 22)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는 있되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나 미군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는 미군 당국이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거부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11. 20~)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모두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과 소파개정을 주장했다. (11. 20) 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한미 관계 악화'부터 우려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 미대사를 통해 간접 사과를 했으나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소파개정에 대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 27)

### 3. 경제자유구역엔 인권은 없다!

자본의 경제활동의 자유만 거의 제한없이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1. 14) 민주노총·민변 등 92개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 1), 민주노총의 파업(11. 5) 등에 이은 숏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관련 40여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 것이란 우려를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월차휴가 폐지·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의 확대 등 노동권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외국인학교·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 등을 허용하고 국내 관련 규정을 대폭 면제해 공교육과 의료보장 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 환경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감면해 마구잡이 개발을 부르게 된다.

이에 양대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대위를 발족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11. 27) 범대위는 대통령을 향해 법률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논평

-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11. 2)
-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11. 9)
-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11. 16)
-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11. 23)
-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11. 30)

### 인권이 이야기

-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11. 5/윤현식)
- 빈곤·신자유주의·인권문제에 눈을 뜨자 (11. 19/박재현)
- 민간보안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11. 26/이영일)

### 인권정보자료

-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11. 6)
-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잡이』 (11. 13)
- 『형평운동의 재인식』 (11. 20)
-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International Human Rights)』 (11. 27)

### 기획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국제엠베스트 한국지부 (11. 2)
- ⑥ 인권교육을 향해 간다...한국교육사회 (11. 16)
- ⑦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YMCA 아동인권센터

### 연재-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산자 사망 구치소 의료 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 권고 빠져 (11. 7)
- 국가인권위에도 바람직한 남관사범 중국동포...인권 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11. 7)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돌아다 (11. 14)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살림 1주년 앞두고 영결 공연 (11. 21)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11. 28)

### 중요 판결

- 서울지법(아래의 '서울지법'은 생략)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행려자 오인 6년여 정신병원 감금당한 내몰린 노동자에 국가배상 판결 (11. 6)
- 민사830단독(재판장 신해중), 전교조 여성조합원 경찰 알몸수색 국가배상판결 (11. 6)
- 민사830단독(재판장 신해중), 불법집회 참가 우려 대우차 노조원 불법연행·감금 국가배상 판결 (11. 7)
-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 (11. 7)
- 민사300단독(재판장 윤용렬), 청와대 앞 1인시위자 경찰 강제연행에 대해 국가배상판결 (11. 7)
-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치료기회 박탈당한 재소자에 국가배상판결 (11. 22)
-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직장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배상책임 인정 (11. 26)
- 현재,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제13조 위헌 결정 (11. 28)

# 인권하루소식

2002년 12월

(제2229호 ~ 제2246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3일(화)

제 22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전국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인권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 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평가, 그리고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을 위해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11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전국 30여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1백3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전체토론에서 93년 세계인권대회 준비 민간단체 공대위에서부터, 94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96년 과거청산국민위원회, 98년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대책위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그리고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및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개괄적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향후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채 전체 토론은 마무리됐다.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3~4개 소모임으로 나뉘어 8개 소주제 토론을 총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인권교육의 방향'을 위한 토론은 '영감 떠올리기'식 회의를 하면서 공동자료실 운영 등 실천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국가인권위 대응 전략'을 위한 토론에서 국가인권위의 폐쇄성·관료성·소극성 등 문제점엔 공감하면서도, 대응 전략과 관련에선 사안별 대응을 잘 하자는 주장에서부터 별도의 논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또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 토론 마당에서는 '운동사회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가부장성 문제가 신랄하게 지적됐고, 그 밖에 '과거청산의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운동', '수사기관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회권 운동의 이해',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대', '인권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소주제 토론이 있었다.

이번 대회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상근자는 "같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모르는 단체가 많았는데 각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거의 모든 인권단체가 최초로 모여 인권운동의 진로와 여러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밤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토론을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했다. 끼리끼리 박통 간사는 "인권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되는 분위기가 실망스럽다"며, 여성단체연합 등의 연대활동이 인권운동 연대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활동가대회 때 발표된 내용들은 이후 한데 묶여 자료 집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범용)

###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회장 정재현)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국 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넘게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 기간 중에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고 독방에 갇힌 채 인적 사항 및 탈북동기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수 장에 달하는 자술서를 써야 한다"며 "조사과정의 인권침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인 이새를 씨는 "탈북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조선족 남자가 좋은지, 한족 남자가 좋은지 등 성력을 조사과정에서 질문당한다"며 "이는 진짜 탈북여성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지만 인권침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와 같은 조사방식을 택하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성력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 연구소위가 탈북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은 입국 후 약 3년 정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 하는데도 그 이후에도 단수여권만 발급되고 발급 기간도 보통 4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재균 변호사는 "여권발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일반 국민과 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거주 탈북자들 다수가 취업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가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탈북 동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실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강화해 탈북자의 발생 요인이 근원적으로 줄어들게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영)

###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폭력과 미국의 책임

부산영화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암스테르담에서는 국제적 규모의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열렸다. 2백여 편이 넘는 작품 중에서 좋은 인권영화를 골라내기 위해 눈이 시리도록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선명한 작품들은 '폭력과 미국의 책임'을 다룬 영화들이다.

몇 년전 인권영화제에서도 소개되었던 마이클 무어의 신작 <볼링 컬럼바인 Bowling for Columbine>은 '폭력과 미국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져 묻고 해부하는 신랄한 코미디였다.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사우스 센트럴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총기사건 그리고 무역센터 테러... 미국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총기 사건이며 테러들이다. "라디오에서 알려주는 오늘의 날씨, 행복한 아침 식사, 다정한 키스,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들 그리고 미국의 타국 공격 개시..." 마이클 무어가 묘사하는 '미국의 아침'이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의 끔찍한 사고 후에도 미국총기협회 회장인 찰턴 헤스턴은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총을 들자"고 소리 높인다. "내 집의 도둑은 내가 죽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폭력과 전쟁은 20세기 인권침해와 전쟁 리스트를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

미국의 폭력에 대한 아랍권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고귀한 희생 Noble sacrifice>은 이란 최대 종교행사인 아슈라를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헤즈볼라 게릴라가 직접 찍은 자료를 차용한 이 영화는 아랍인들이 얼마나 미국에 대한 증오에 불타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행사에 참가한 남성들은 정수리를 날카로운 칼로 긁고 계속 손바닥으로 쳐서 온 몸을 피로 적신다. 수만명이 참여한 광장은 피바다가 된다. 이들을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미친 놈들'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국가들에 가해진 무수한 폭력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력 침공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반문명'이라고 몰아세우고 악마시한 무언의 폭력도 상기해야 한다.

<내 딸 없이 Without my daughter>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80년대 베스트셀러 <솔로몬의 딸 Not without my daughter>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미국인 아내가 학대하는 아랍인 남편에게서 딸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솔로몬의 딸>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내 딸 없이>는 증언한다.

결프전에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만 쏘아 던 것이 아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아랍인들은 미국이 응징해야 할 악마가 되어줘야 했다. 영화에서 한 미국인은 털어놓는다. "미국은 항상 적이 필요했다. 냉전 후에는 아랍이 좋은 대상"이었다고. 아랍인의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전에 미국의 사악함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 (김정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연합 등, 재판권이양·소과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과 개정협상 촉구(11.25)/ 용산 미8군사령부 앞 '여성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시국대회...미군재판 무효·미대통령 사과·소과 개정 촉구/ 부시, 주한 미대사 통해 사과 메시지 전해/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운전병 마크 워커, 출국(11.27)/ 문인 1052명, 소과 전면 개정 요구(11.28)/ 경찰청, 미군 무죄평결 항의 시위대 경찰 '과잉진압' 관련 감찰(11.29)/ 시민 5천여명, 광화문 촛불 추모행사(11.30)/ 네티즌, 백악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12.1)

2. 국방부, '자살'을 향한 끝없는 고집  
국방부 특조단,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자살' 조사결과 발표/ 의문사위, 국방부 조사결과 사건 이해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 신뢰성 없다 반박...내년 초 재조사 밝혀(11.28)/ 민변·전주교인권위 등 29개 인권단체, 허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11.29)

3. 고문 이전에 불법체포 있었다  
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수사관들이 조천훈씨 및 공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공정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세입자들, 울 한해만 37건 화재발생 방화 의혹 제기(11.25)

5. 경제자유구역법 절대 안된다!  
양대 노총·녹색연합 등 110개 단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6)

6. 한 노동자 또 죽다  
민주택시노조연맹, 회사 부당노동행위 항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7. 유엔, 이라크 들어간다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의심 시설 사찰 시작(11.27)/ 미·영 연합군, 이라크 남부 바스라 민간인 시설물 폭격 30여명 사상...미군, 카타르에 이라크침공 지휘센터 구축(12.1)

○주요 판결 및 결정 : 서울지법, 롯데호텔 여성노동자에 대한 회사간부 상습 성희롱 회사 상대 손해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11.26)/ 현재,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13조 위헌 결정(11.2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4일(수)

제 22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 미국인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사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루마니아 등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인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처벌협정'에 이미 가서명을 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미국이 군사지원 여부를 미끼로 각국 정부에 협정 체결을 강요한 결과다. 미국은 우리정부에도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 이에 대한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2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집단살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범죄를 저지른 어느 누구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이같은 반인권적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데 절대 반대하며, 앞으로도 협정 체결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협정 체결국은

관할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해당 범죄자를 조사·기소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에 위치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법은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실령 법률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계획 내지 용인 하에 행해진 범죄일 때 미국 법정이 이들을 제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교통상부 조약과 관계자는 "외교관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정보화시대의 인권①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엮은이 : 진보네트워킹센터 (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는 정보기본권 사례를 들며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이들 5가지 권리들은 국민이 정보화시대에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자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로서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에 개인 및 집단의 행동과 생각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례로서 직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입장,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이메일·메신저 기타 통신이용 감시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집은 rights.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다음주 화요일에 소개됩니다.

#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없는 한국을 꿈꾼다!

##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1일 전국에서 모인 60여명의 네팔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은 안양 전진 상복지관 강당에서 네팔이주노동자연대(United Nepalis Migrants Association, UNMA)를 결성했다.

네팔이주노동자연대는 내전상태에 있는 네팔에 평화를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네팔인 씨머리 씨는 "현재 네팔에서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네팔 국내의 무정부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팔은 1990년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의회당과 공산당이 주요당으로 부상했고 94~95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카트만두 지방정부를 이끌기도 했지만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정부의 부패와 지도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내분은 계속 가중돼 왔다. 이런 가운데 그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던 마오주의자들은 96년 의회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정부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오주의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며 이들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격렬해지는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마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네팔이주노동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팔문화센터의 대표이자 이번에 네팔이주노동자연대의 대표를 맡게된 몰리 씨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내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집이 시골에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내전은 더욱 격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군이 마오이스트로 위장 잠입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고 마오이스트들이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심지어 귀국

한 동료들은 절대 네팔에 돌아와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네팔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한 것은 한국 및 네팔정부와 싸우는 것. 씨머리 씨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땅인 네팔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에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홍콩이나 일본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네팔이주노동자연대는 앞으로 한국사회에 네팔의 상황을 알려나가는 한편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네팔의 평화를 요구하는 엽서보내기 운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 홍콩이나 일본 등지에 퍼져있는 네팔이주노동자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희]

###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한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 사고를 넘어 거주국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달 23~25일 성공회대학교 세천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최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코리아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 재외동포들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직접 비교·발표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라고 재외동포의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어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이 재외동포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재외동포들이 한/조선 반도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가슴아프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화교는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자격은 보다 확대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5일(목)  
제 22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이 땅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이미 10년을 넘어섰다. 그 동안 한국사람과 혹은 이주노동자 끼리 결혼해 태어난 수많은 이주노동자 2세가 있다. 또는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동들도 많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주1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많은 이주노동자 2세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2세들 중에서도 몽골인들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몽골인들은 이주해 올 때 2세들도 함께 데려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 2세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아직 어린 반면, 몽골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취학할 나이이다.

몽골인 오동주야 씨는 "정부의 지침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는 몽골아들도 있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그만둔 아이들도 꽤 되는 편"이라며, "그만둔 후에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립학원을 다닌다"고 말한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몽골인 미라 씨도 "군포 등에 사는 많은 몽골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학교가 아닌 미술, 영어 학원

같은 사립학원을 다닌다"고 말한다. 실령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몽골학교'의 정혜승 선생님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이들에게 그러한 서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거나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닌 단지 '청강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결국 이런 경우 학교를 다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거나 아예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몽골학교'에는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졸업장이 없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한 몽골아이의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재보자는 "여기저기 다른 초등학교를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겨우 우리 학교에 청강식으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중략)... 중학교 진학을 위해 전부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용기를 주고 있었는데, '년 중학교 못 가니까 학원을 알아봐라'는 얘기를 들어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제가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라고 말했다.

'몽골학교' 정혜승 선생님은 "이주노동자 2세들의 교육 문제는 한국의 공교육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과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대안학교 설립,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몽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용희]

###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지난 달 25일 발생한 부천시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찰청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본지 11월 28일자 참조>

부천경찰청 김동성 집행위원장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방화가 아니길 바라지만, 정황을 종합해보면 방화가 분명해 보인다"며 "과학적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초동수사단계부터 4남매의 엄마가 25일 새벽 기도실에 촛불을 켜둔 채 신문배달을 위해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을 단서로 '실화'일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조사해왔다. 그러나 지역사회단체들은 △올 한해 동안 이 지역에서 37건의 화재가 발생한 점 △이번 화재가 나기 이틀 전 같은 건물 다른 가족이 이사를 나간 점 △같은 날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사진 촬영하는 광경이 목격된 점 △성냥불이나 촛불로 10분만에 집 전체가 완전히 타기 어렵고 현장에서 기름냄새가 많이 났던 점 등을 들어 누군가 빈집인 줄 알고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3~4월에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시청에 제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수수방관했다"며 분노를 토했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대표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공청과 부천시청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화재 위험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인권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인권교육 담당관들을 만나, 인권위 첫째의 교육사업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지 들어보았다.

## 방어본능 뛰어넘기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급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방향은 관련 공무원 양성 및 재훈련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힘을 쏟고 있다. 아직은 교육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한 일회성 교육이며, 강사진이나 강의기법도 다양하지 않다.

시범교육은 어디까지나 시범교육이며, 인권위 자체가 인권교육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의와 독려를 통해 인권교육을 강제해 내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얽혀져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관계기관들이 '이미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거나 '특강 수준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기관의 '방어본능'을 인권교육으로 유인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인권위는 시범교육을 통해 경찰, 교정, 검찰, 군대 등 각 대상별 모범 강의안을 제작하고 있다. 「경찰과 인권」, 「교정과 인권」도 10월과 11월에 각각 제작됐다.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풍토에서 강의안의 제작은 의미가 크다. 모범강

의안은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에 덧붙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담은 시나리오와 활동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를 내년 초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권위에서 제작되는 강의안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지만 인권에 대한 해석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강의안과 교재를 내놓아, 상호비교와 내용첨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 우선순위 정하기

인권위는 각 대학의 교과운영 실태와 교사교육을 위한 교사인권교육 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인권시민단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서야 할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8월 새사회연대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인권위 각 회의별 의사 일정 및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권위는 회의 당시 비공개 안전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인 및 관계인의 보호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더

초·중·고 교과서 모니터링도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다.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분명하지만, 실태조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우선순위와 과제를 정하는 과정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인권위는 「인권교육기본지침서」를 개발하여 오는 9일 전문가 토론회를 가지며, 내년 2월에 아동인권교육용 동화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2003년에는 아동발달 수준에 맞춰 초등학교 고학년용부터 순차적으로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가 다른 나라 국가인권위의 홈페이지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은 내년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쯤에는 사이버 인권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류은숙)

라도 공개됨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인권위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비공개 사유로 적절치 않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보면 자기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회의록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전제이며 인권위와 인권위원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잣대'라며, "인권위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권위원들을 검증하겠다"라고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99년 교육부 징계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지난해 10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이미 공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6일(금)

제 22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 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징벌을 받은 것 △금치 징벌 중 이라고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5일 서울지법 민사 40단독 이혁 판사는 "대구교도소장이 재소자가 금치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접견권과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금치는 별도의 징벌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교도소 측의 금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집필문서 발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이 발송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치 기간 중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 145조 제2항 자체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제한이며 포괄위임 입법 금

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의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금치처분 기간 중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견, 서신,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 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대구교도소 측의 금치징벌이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는 당시 교도소 측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원고가 단식에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금치기간 중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 금치 기간 중 수용자의 접견권 등을 제한하는 문제나 이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여중생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한미간에 협의체널을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 쪽에 인도된 뒤 한국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용의자 목적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협의는 지금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공무증명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데 결국 미국이 하게 돼있다"며 "운영상의 보완이 아닌 협정의 관련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를 인도하기 전 예비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소 시 한국수사당국으로의 신병인도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 협정에 따른 양해사항과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지만 정부안은 소파 주요문서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상의 개선으로 한정돼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소파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규정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중생사망과 관련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집회와 행사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여중생 사망 사고일인 목요일을 맞는 5일엔 하루종일 관련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민주노총은 낮 12시 살인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사관측에 부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기자회견 내내 민주택시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미대사관 주위를 돌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종교인들도 미군참호와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열었다. 불교대책위원회는 조계사에서 108배 정진을 했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열린시민공원에서 월요일부터 4일째 노숙 단식을 진행하며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시민 3백여명은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사망한 여중생의 넋을 위로하는 촛불 추모제에 참여한다 이어 7시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천주교대책위원회의 생명·평화 촛불 음악회도 함께 했다. [김보영]

###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 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는 찬양고무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표현물의 양이나 수위를 봤을 때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그러나 징역으로 실형을 살기엔 형이 과중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 [이주영]

### 네번째 반딧불이

## 20세기 세계혁명의 기록 <붉은 대기>

올해 마지막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7일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작품은 이번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붉은 대기>. 프랑스 신좌파의 시각으로 20세기 후반의 인류역사를 정리해보고 있는 이 영화는 프랑스의 영화 작가 크리스 마르케가 78년에 완성된 작품을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이후 다시 편집해 1,2부로 완성했다.

작품은 1967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977년까지의 세계혁명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하고 답하고 있다. 1부에서는 68혁명과 베트남 전쟁, 체 게바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에서의 무장투쟁, 그리고 철레의 아옌데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2부는 소련의 프라하 침공과 스탈린주의의 실정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에는 언제나 '지적, 창조적, 실험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고 있듯, 그의 대표작인 <붉은 대기> 역시 작가의 창조적 역량이 꿈틀대고 있다. 3시간의 다소 긴 길이는 보는 이들의 어지간한 인내를 요구하지만 20세기 후반 세계혁명을 기록한 진귀한 자료화면과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풀어 쓴 영상 언어는 보는 이들에게 값어치 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3시와 7시 두 번 상영되며 1부와 2부 사이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입장표는 30분전 배부하며 지정좌석제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7일(토)  
제 22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있다

###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이태원을 지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무인감시카메라(CCTV)에 찍히고 있다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윗가게·가방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큰 길 가에 지난달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감시카메라는 공중에서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24시간 지켜보고 있고, 그 기록들은 시시각각 용산경찰서 소속 이태원 파출소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

"사생활 침해하는 거잖아요. 일거수 일투족 다 찍히니, 우리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한 상가에 모인 대여섯 명의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태원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가 하도 많아서 무려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구청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리에서 문제가 되는 호객행위는 길가의 옷·가방·구두 등을 파는 가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이끄는 것. 이태원 파출소 이모 경장은 "호객행위가 심하냐는 물음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행위가 이뤄지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며 "일일이 근무자가 가 있기 힘드니까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상인들도 호객행위 때문에 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감시카메라 설치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과 의견을 교류했다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은 "관광이라는 대 명제 아래 관광질서를 위한 거니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옛날에는 손님을

잡아끌고 호객행위가 심했지만, 이전 자체정화해서 정중하게 뭘 사겠냐고 묻는 정도"라며 "관청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만을 크게 제기하진 않지만 카메라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호객행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길을 물어보는 외국사람에게 답해줬다고 '삐끼'라고

파출소에 불려간다"고 말했다. ○씨도 "호객행위" 단속이 필요하다 해도,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씨도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 말했다. "뭘 사러 온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큰 위험이 있는 곳도 아닌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데다 설치 사실을 표시판 등으로 알리지도 않고 찍힌 사람들이

(→2면으로 이어짐)

###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도청의혹을 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인권단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담사례가 '내 머리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어' 식의 도청의혹인 것을 정치권이 알고 있는가. 근거를 대지 않는 한나라당이나 구린 구석 가리기에 급급한 국정원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두려움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지김,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조작사건들이다.

국정원이 도청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다른 원인은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비공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심의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전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 댔지만, 그러한 개혁의지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에 대한 짝사랑과 비호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것이 국정원의 개혁을 통치권자의 의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통치권자의 '변심'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제도적 개혁을 이뤄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청문제와 그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법이다.

도청은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국정원 개혁은 근본적이고 단호해야 한다.

#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문날  
인반대연대의 이마리오 씨가 낸 '열손  
가락 지문 반환 및 폐기에 대한 경찰  
청의 거부조치 취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21  
일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관  
련 전산자료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냈다.  
이것은 지문정보의 수집이 법률적 근  
거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에게  
알린 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

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  
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  
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  
뿐만이 아닌, 정보자체의 반환 폐기  
또는 삭제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  
다"며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요구한 정  
보의 반환 및 폐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법이나 법령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이마리오 씨)  
에게는 반환 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경찰  
청의 거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  
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실령 위헌적인 요  
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위헌이 선언  
되었을 시,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순"  
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의 윤현식 씨는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인식은 행정부, 경찰청의 그것  
과 똑같다"며 "법원이 행정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  
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절차적이고 형  
식적으로만 접근한 것 같다"고 비판했  
다. (최용희)

(=>1면 '이태원' 기사에서 이어짐)

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사생  
할 보호 조항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무인감시  
카메라는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은데 반해, 국민을 공공연한 감시로  
몰아넣어 감시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  
의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  
인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  
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구청 등 관청과  
기업들이 무인감시카메라 촬영을 남발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때 지침에  
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명백한  
위험 등 엄격한 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를  
알리고 △카메라에 찍힌 당사자가 기  
록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폐기토록 하고 △내부 관리 절차를 엄  
격히 해 외부 유출을 막는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  
보호법 상으로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  
는 것(도청)과 달리 몰래 어떤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  
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주영)

# 입시전쟁 끝의 비판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10대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경북포항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모 학  
생(15)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것을 비판해 자살한 것 이외에, 최  
근 수능시험 이후 알려진 성적 비판 자살만도 2건이다. 11월 초에는 학습부  
담에 시달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에서는 6일 성명을 발표, "학생들  
이 죽어 가는 데도 그 동안 언론과 사회에서는 입시를 공경하고 정확한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벌차별을 정당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학생  
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에서 활동 중인 이안송진 씨는 "현재의 입시경  
쟁체계가 이러한 자살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입시경쟁의 원인을 '학  
벌사회'에서 찾았다. 또 입시경쟁의 폐해가 고등학생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  
고 중학생 이하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고교평준화의 폐지를 주장하  
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고등학생뿐만이 아닌, 중학생 등의 학교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 역시 "예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이런 입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학 전 유치원생도 학습부담에 시달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서는 "입시부담을 중학생, 초등학  
생에게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학서열화가 고등학교서열  
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교육연구소 강신현 사무국장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자  
율학교의 문제는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한 학교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을 파편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사무국장은 성  
적비판 자살처럼 입시경쟁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학편제의 개  
편과 수능 대신 대입자격평가시험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근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0일(화)

제 22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축소

##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최근 한국유흥업중앙회가 선불  
금을 받고 달아났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 배포한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은 9일 느티나  
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불금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관련 업소에 대해 엄정하게 수  
사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촉구했다.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업주들로 이루어진 유흥업중앙회는 자  
신들의 회보 '서비스 월드' 11월호 부  
록으로 '선불금 도주 용의자 수배'라는  
이름의 명단을 1만여부 만들어 배포했  
다. 이 책자엔 남성 4명을 포함, 2백  
88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  
호·사진·인상착의 등이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성매  
매 피해여성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와 각  
종 벌금, 보증강요, 지출강요 등으로  
여성들의 빛, 이른바 선불금을 늘린  
다"며 "심지어 여성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한 뒤 한 여성이 도망을 치면 다  
른 여성에게 그 빚을 씌우고 다른 업  
소에 팔아 업주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  
는 일도 빈번하다"고 실태를 알렸다.

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는  
"이런 착취와 성매매 강요를 견디지 못  
해 여성들이 도망을 치면 업주들은 여  
성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  
찰은 선불금 액수가 2천만원만 넘어도  
긴급체포령을 내려 여성들을 붙잡곤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선 대표는 "선  
불금은 여성들을 업소에 계속 묶어두  
며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불법채무이므

오늘 3~5면 : '2002 인권 10대 소식'

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오히  
러 여성들을 사고 파는 업주들이 인신  
매매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알  
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윤  
락여성에 대한 체권은 그 계약의 형식  
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한다. 이것이 적용된 예는 드문데, 올  
해 상주지청 구자현 검사가 성매매 업  
소에서 도망쳐 사기죄로 고소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소개업자를 폭력·직업안정법 위반 등  
의 혐의로 기소해 주목받은 바 있다.

유흥업중앙회는 명단을 공개한 책자  
에서 "유흥주점 선불금은 매춘을 전제

#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이 나라의 자주를 바라고 이 땅의 생명·평화를 사랑한다면, 이제 촛불을  
밝힙시다!" 9일 오후 3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  
시민열린마당에서 천주교 신자와 시민 등 4백 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군의 회  
개와 소파개정 촉구를 위한 8일 간의 단식기도회를 마치는 미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개정 속에서만 진실 어  
린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주  
권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신부는 방미대표단의 서명을 받지 않은 백  
악관과 방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미 하원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의 고  
통과 분노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미국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선 것이 아님을 미국이 알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단식기도회에 참여했던 김현영 신부는 "우리는 항미 자주독  
립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거처럼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지 말고, 모  
두 소파개정까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구현사제단의 기도회가 끝난 후 불교계에서 단식기도 농성을 이어  
받았다. '미군범죄근절과 SOFA개정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는 단식기도 선언  
문을 통해 "소파를 개정하고 우리 두 딸을 죽게 한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물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서도 질책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의 단식 기도회는 오는 13일까  
지 계속된다. (고근에)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

아직도 인권은 신을 중...

2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 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 반인권적 행위 제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자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 말기에조차 뼈아프게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권을 냉전과 개발과 관료주의적 혹은 가부장적 권력 앞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국가인권위가 생겨나고, 민주화보상위가 수없는 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와중에도, 인권은 여전히 고문받고 차별되며 굴종과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적 질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성적 지향의 평등이나 욕망추구의 권리, 인류문화유산의 향유, 관용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같은 또 하나의 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과거와 다름없이 신념을 드러내 나가지 못하고, 작업장에서의 인간성을 부인당하고 있다.

오히려 인권을 위하여 지켜야 할 전선이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분화해가는 상황이다. 민변 토론회는 "인권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현정권을 비판했으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뻗어오는 자본권력의 억압은 "과거에 비해 나아진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우리로부터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보안법이나 소과, 노동법, 고문, 가부장제, 신념에 대한 편견 등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래 지속돼 온 인권억압의 대표단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B. 터너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게, 아동 옹호자들이 부모에게, 이민노동자들이 그들의 주공동체에 대해"해야 하는, 전방위적, 전생활적 반인권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국가권력을 대체해 오늘날 자본권력 혹은 문화권력이 국가권력의 숙주가 돼 인권의 적으로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거처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권이 재산과 상품이 돼 시장에 팔려가고, 국가는 이 인권의 자유거래를 위해 생활공동체를 시장공간으로 전이시키는 악역을 담당한다.

우리의 인권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고문과 공작의 주도자로 의심받는 자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후보의 한 손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한, 민주화보상위와 의문사위의 판정에 저항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과거 회고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위의 활동에 탄지를 거는 반시대적 관료조직이 존존하는 한, 세계체제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암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상희:건국대 법대 학장)

주간인권호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1. 소과개정 촉구 반미 불길 활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살인미군 회계 촉구 단식 노숙 농성(12.2~9)/ 전교조, 초·중·고교 소과협정 개정 필요성 공동수업(12.2)/ 기독교교회협, 긴급 기도회(12.3)/ 국회의원 31명, 소과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과 '개선' 지시(12.3)/ 정부,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과 운영 개선 추진(12.4)/ 방대위, 정부 미분책 철회·근본적 소과 개정 촉구(12.4)/ 방미투쟁단, 뉴욕유엔본부 앞 기자회견(12.4)/ 조계사, 기원법회(12.4)/ 민주노총, 미대사관 앞 항의집회(12.5)/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미군 참화와 소과 개정 위한 범불교도 108배 정진'(12.5)/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소과 운영방식 개선 합의(12.6)/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소과 개정 반대(12.6)/ 예술인 129명, 여중생 무죄판결 규탄 및 소과 개정 촉구(12.6)/ 문인협회, 마로니에 공원에서 추모시 낭송회(12.6)/ 방미투쟁단, 백악관 앞 촛불시위(12.6)/ 네티즌,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 한꺼번에(12.6)/ 3만여 시민, 미 대통령 공식사과·소과 개정 요구 미 대사관 앞 촛불시위...전국 30여곳 항의집회(12.7)/ 미 하원의원 5명, 방한 일방 취소(12.7)/ 방미투쟁단, 소과 개정 촉구 한국민 서명지 백악관 전달 실패...삭발식 거행(12.8)

2. 학벌사회가 학생을 죽인다 : 경북포항 한 중학생, 원하는 학교 진학 못해 비관자살(12.4)/ 학벌없는사회전국학생모임, '입시전쟁 비관자살 연령 낮아진다' 우려...자립형 사립고 확대, 경쟁 부추겨 더 심각한 문제 발생 경고(12.6)

3. 이라크, 전쟁 피하고자 안간힘 : 유엔사찰단, 이라크 대통령궁 불시 사찰(12.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촌 유엔 식량창고 폭파(12.3)/ 국제적십자사연맹, 케도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겨울 맞은 북한주민 곤경 우려(12.5)/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실태 보고서 유엔 제출...후세인, 90년 쿠웨이트침공 사과(12.7)

4. 기탁 : 국제연예네스티 한국지부·민변 등 12개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취지 훼손하는 '불처벌협정' 체결 반대 성명(12.2)/ 대한변협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국내 탈북자 입국 후 조사·여권 발급 과정 차별 및 인권침해 당한다"(12.2)/ 오석동 세입자대책위원회·부천시민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 오석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12.4)/ 남동발전 제외 4개 발전회사, 파업종료 8개월 지나 평조합원 상태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및 결정 :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지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 인권 10대 소식(1)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인권사건(총 58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2년 인권 10대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18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편집자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케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6월 19일 주한미군과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병인 워커 병장이 관제병 니노 병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반미의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나 미군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과)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재판무효 △주한미군지위협정(소과)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각지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12월 4일 정부가 소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이 5일 제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나 소과의 전면적 개정이 아닌 단지 운용상의 개선 약속은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2. 국가인권위 점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 ... 저상버스 도입 등 성과 거둬(62.7%)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씨가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참사에 이어 또 다시 리프트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던 장애인들의 분노는 격화됐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즉각 서울시측을 상대로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실질적인 이동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5월 31일 월드컵경기장 진격투쟁, 7월 1일 광화문 천막농성, 7월 29일 서울시청 식당 점거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진개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을 거부했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비롯한 이동권보장 대책에도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8월 12일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9월 18일 서울시측에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 구성 계획'을 밝힌 것을 계기로 마무리됐다. 박경석 이동권연대 대표는 무려 3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이 기간 동안 각계의 동조단식이 이어졌다. 서울시측은 끝내 '발산역 사고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으나, 9월말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내에서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도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년여에 걸친 장애인이동권투쟁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들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의문사 1호'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 등이 각각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70년대 전향공작, 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삼청교육대 등 국가기관들이 공동기획, 집행했던 대규모 반인권 범죄의 실체를 규명해내는 데도 상당히 근접했다. 74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 84년 숨진 허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군 상부에 의해 은폐됐다는 조사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자료제출 거부, 시간 끌기 등 가해기관의 조사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은 충분하지 못했다. 그 결과 30건이나 되는 의문의 죽음들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겨둔 채, 의문사위는 9월 16일 법으로 정해진 조사기간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36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전개했고 국회는 11월 14일 통화내역 요청권 신설과 조사기간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사권한 강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의문사위는 내년에 '실탄' 없이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한편, 국방부가 허일병 사건 관련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정면반박하고 나서 의문사위가 짊어져야 할 '진실 찾기'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 인권 10대 소식(2)

#### 4. 빈곤의 늪,

####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49.2%)

2001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3월 26일,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여 만에 사망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달달이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던 최 씨가 26만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적은 생계비마저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최 씨를 엄습했다. 이혼한 남편에게서 아들의 양육권을 찾으려면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양육권과 수급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던 최 씨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사실상 유언이 돼버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라던 최 씨의 말은 수급권 운동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고 최옥란 씨의 49세를 맞는 5월 13일,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등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2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98만9천원이었다.

#### 5.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44.9%)

고문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았음이 드러나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10월 26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 받던 피의자 조천훈 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 끝에 사망했다. 대검찰청은 직접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기소하는데 이어 홍경령 주임검사를 고문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추가로 대검 검찰부는 조씨 등 공범 혐의자들이 물고문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자백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말실조사·말실조사 등 반인권적 관행 철폐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 참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해 또다른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유린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6.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42.4%)

여호와와의 증인과 오태양 씨처럼 종교적 이유만으로 여겨지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비종교인들의 거부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쟁반대의 신념에 따라 7월 유호근, 임치윤 씨가 병역거부선언을 한데 이어 8월 나동혁 씨와 더불어 임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이 집단적으로 예비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여성해방연대와 노들장애인야학 등 소수자 단체들도 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 동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병역거부권운동은 지난 5월부터 학생단체들이 결합해 대학가로 확산됐다. 8월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함께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서명 운동이 거리와 온라인 상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 토론이 인터넷 게시판과 신문 지상에서 활기를 띠었다.

한편, 1월 29일 서울지법(박시환 부장판사)은 "양심과 병역의 의무는 공존"해야 한다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와의 증인' 이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 영향으로 오태양 씨를 시작으로 유호근, 임치윤 씨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 7. 전원추방 방침에 맞선 이주노동자 권리 투쟁 활발(40.7%)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출국 방침과 단속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3월 정부는 1년 후에 26만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고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항의하는 1천 여명의 중국동포들이 4월 12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소속 조합원들 역시 합법적인 체류보장과 노동을 요구하며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4월28일부터 석달 남짓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7월,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 오히려 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7월 22일 농성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계속됐고,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는 활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 인권 10대 소식(3)

투쟁에 대한 표적단속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10월엔 민주노총과 외노협, 민변 등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 8. 군산 개북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무참히 희생(35.6%)

1월 29일 군산 개북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14명의 여성들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1층 출입구는 이중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고, 각 방의 창문은 온통 쇠파창으로 둘러 싸여있음이 확인됐다. 즉 화재로 숨진 여성들은 불법으로 개조된 1평도 되지 않은 쪽방에서 감금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온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업주에게도 성적 갈취를 당하며 목욕탕과 미용실 출입조차 통제당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와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했으나, 업주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달도 안돼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2년 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감금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 충격을 더해주었다.

이에 경종이라도 울리듯 7월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들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여성들의 감금과 성매매 강요 행위를 막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밝혔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성매매근절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9. 공무원 노동자, 정부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33.9%)

복지부동의 철법통으로 상징됐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올해 정식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 상의 기본권이자, 98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촉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불허방침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월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의 피리표를 떼고 노동조합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9월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조합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조합법은 명칭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조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입법저지

투쟁이 이어졌다. 10월 3일 차봉천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자 노동조합 지도부는 구속결단식을 연데 이어 7일 6명의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기습점거했다. 11월 노동자대회에는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였다. 매년 경찰의 원천봉쇄와 폭력진압, 조합원들의 대거연행과 구속이 잇따랐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한 공무원 5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 10.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사측, 보복성 인권유린(30.5%)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력산업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개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아래 발전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38일간 '산개파업' 전술을 통해 정부의 '발전소 매각과 민영화 방침'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투쟁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소강국면에 빠져있던 노동자들의 투쟁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4월 2일 민주노총이 "민영화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굴욕적 타협을 하면서 파업은 종료되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의 명을 쓰게 됐고, 이는 파업참여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구속, 재산가압류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318명에 달하는 해고인원은 노동쟁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였고, 파업종료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무려 560여명에 대한 견책·감봉·징직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회사측은 파업참가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의 저항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가압류는 조합원은 물론, 가족과 보증인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조치로써, 노동권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회사측은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파업참가자 행동기록표 작성 및 등급분류를 통해 노동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일상적 집회와 회합 방해,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 전 방위에 걸친 보복성 인권탄압이 잇따랐다.

이밖에 10대 소식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기파업(27.1%)' '인권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입법저지(27.1%)'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23.7%)'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많은 사람이 10대 인권소식 중 하나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의료문제로 잇따른 사망(16.1%)'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청송감호소 수용자 집단단식(15.3%)' '국가인권위 구제활동 시작(13.6%)'도 올해의 중요한 인권소식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74년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인혁당 관련자 고 장석구 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가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수사 관련자 및 교도관들의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 공판기록을 통해 밝혀냈다. 이는 유가족과 관련 사회단체 차원에서만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에 10일 전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공판 조서의 위조 △증거 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 맞추어진 점 등의 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우선 도예중 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를 재심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수사에 참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2002년 12월 11일(수)  
제 22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수사관들이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검사가 조사할 때도 중정의 수사관이 참여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재심청구의 사유로 제시된 증거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은 아니나,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들인 만큼 법원은 마땅히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가 별도의 확정판결(제420조)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2면으로 이어짐)

**클릭! 인권정보자료**  
**정보화시대의 인권②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낸 두 권의 소책자 「정보접근권」과 「정보공유의 권리」를 소개한다.

△정보접근권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빈부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격차가 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서 개인(자기)정보의 알권리, 공개정보의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예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이 치료제나 클리백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조성되어야 한다.

\* 소책자는 rights.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은아]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1면 '인혁당' 기사에서 이어짐)

단,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나 별도의 확정판결을 통해 재심사유를 입증받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재심청구에 앞서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 중 한 명인 이영교 씨는 "인혁당 사건은 유신시절 사법부를 수치스럽게 했던 사건이기도 하다"며 "법원이 재심을 개시해 진상을 밝히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 더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임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나아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 조항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최 씨는 전했다. (이주영)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먼저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준법서약제의 폐지 △감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현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는 자유권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고 재정투자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사회권에 관한 한 인권위는 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후, △사회권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달라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 △사회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민중운동단체를 지지·엄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인권위의 법적 한계에 대해 발제를 맡은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법적 한계보다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 시작에 맞춰 짤막한 인사말만을 한 후 곧바로 행사장을 빠져나간 김창국 위원장이 단적인 예였다. 한 교수는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라는 회의가 들었다"라며, "인권위를 대표적으로 고민해야 할 분이 인권위의 운영방식

에 대해 더불어 고민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가 딱딱한 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따스하고 부드러운 인권의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인권위는 총 15회, 1백39개 단체, 1백92명 참석을 내세우지만 이와 같은 의례적인 간담회 몇 번이 전부였다"라며, "함께 구급시설을 방문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 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유린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은 퇴진운동의 거센 흐름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진퇴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라고 경고했다. (범용)

##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 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각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에 대해 대선 후보 7명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만 동의를 표시했으며 다른 후보들은 답변을 주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며 답변을 미뤘다고 전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성매매 강요, 감금과 감시, 폭행...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인권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던 기지촌이 한국여성대신 외국인 이주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 실상을 폭로했다.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진경 간사는 "2명의 필리핀인과 1명의 호주인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해 조사과정이 상당히 위험했음을 암시했다. 조사 대상은 필리핀 여성 70명. 이 중 30명은 현재도 기지촌에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원에서 일하다가 대사관으로 도망친 위니(16세, 모두 가명)는 입국 비용의 명목으로 2개월 동안 전혀 급료를 받지 못했다. 평택에서 일하던 치키(27세)는 업주로부터 '바 파인'(한국에서의 2차)을 강요받아야 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매매 강요나 다름없었다. Y 클럽에서 일한 라에(18세)는 밤 9시만 되면 강제적으로 스트립쇼를 해야 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기지촌의 필리핀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급료의 착취, 강제로 할당되는 판매량, 성매매 강요, 자유시간의 제한, 감금·감시 등이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클럽이 엄청나게 긴 노동시간에 비해 한달에 1일 정도의 휴일만을 허락하고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각각이나 결근을 하면 언제든지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위한 14일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11일 서울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여중생법대위의 오종렬 상임공동대표는 "비상시국인 만큼 12월 14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제반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여는 말을 했다. 민주노총의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발적인 범국민 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에선 이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반미감정 조작이라고 음해하고 있다"며 "어차피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주리라 기대하지도 않지만, 민중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 정치권은 방해하지 말고 비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김현숙 대표는 "지난 7일 촛불행진 때 시위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운동은 자주권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고 불의에 대항하는 정당한 표현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2년 12월 12일(목)  
제 22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Y클럽에서 일한 라에의 경우 손님과 맘에 들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12시간 동안 불이 꺼진 방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알콜 중독이거나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필리핀 여성 뿐 아니라 (⇒3면으로 이어짐)

이날 논의된 안건은 △14일 발표될 '주권회복 선언문' 채택 △범국민행동지침 △행사를 위한 재정마련 방안 △31일 1백만 범국민행동의 날 개최 등. '주권회복 선언문'의 작성자는 "소파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범국민행동지침으로 △6시에 촛불을 켜고 추모 묵념 진행 △대회참가자는 초와 컵, 호후라기, 태극기 지참 △6시에 사찰은 타종을 하고 모든 차량은 경적 울리기 등을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14일 주권회복의 날을 통해서도 소파 개정·부시 직접 사과 등 전국민적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욱 광범위한 분노와 열기를 모아 31일에 1백만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마련 방안과 관련, 녹색연합 이재남 사무처장은 "각 참가단체가 10만원, 20만원, 50만원 등 실정에 맞게 내기로 했고, 우리 힘으로 대회를 성사시킨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재정 납부를 독려했다. 14일에 있을 범국민평화대행진은 이처럼 정의를 갈망하는 '보이는 손'들에 의해 성실히 준비되고 있었다. [이주영]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국가기관이 각종 활동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즉 '공보'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업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 또한 공보담당관실을 두어, △인권위의 정책과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인권을식을 함양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활동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인권위는 취재가 안 된다

"인권위, 취재가 안 된다. 창구 다 막아놓고 취재원 접촉 못하게 하고, 기자들이 사건을 먼저 쓸 수 없도록 만든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후 각 층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유리문 앞에서 인터넷으로 취재를 요청하면, 조사관들은 '공보담당관이랑 같이 와라', '할 얘기 없으니 공보담당관이랑 얘기해라'는 식으로 말한다.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인권위에 출입하는 한 기자의 불만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공보담당관 남규선 과장은 "공보담당관실은 언론에서 뭘 관심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공보담당관실이 (기자들과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나온 사실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최근에는 해당 국장이나 조사관을 연결해 직접 설명하게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취재가 안 된다'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 인권위 '입 단속' 지나치다

하지만 현재 기자들이 진정사건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려면 인권위의 의견 후에만 가능하고, 그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1~2쪽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위가 철저히 보안을 지키기 때문이다. 다른 기자는 "인권위가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는 식"이라며, "어떤 진정사건들이 조사되고 있는지 진정 초기부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기자들의 관심은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기보다는 단독취재를 하는데 있는 것 같다"라며,

"진정사건이 인권위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보도되면 (인권위 결정의) 신뢰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전에 보도가 나가 인권위가 좋은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되지 않겠냐"라며,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천시 장애인차별 사건을 들었다.

지난 1월 유시춘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결정 이전에 (⇒3면으로 이어짐)

##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셔도 7곳 수정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려 제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씨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인권현안을 7개로 선정해 최씨에게 제작 의뢰했고 지난 5일 가편집이 완성돼 사무총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시사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최종판으로 △7개 인권현안 중 병역거부권 단락을 삭제할 것과 △나레이션 중 7개 부분을 수정,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 같은 이가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은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며 구성이 오태양 씨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촉박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단지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씨는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마땅히 조사와 구제를 담당해야 할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놓았다. 또 "독립성을 부르짖는 인권위가 작품의 객관성을 꾀해삼아 법무부 운운하는 것도 그렇다"며 씩씩해했다. 이어 "병역거부에 대해 간략히 묘사한 2분 정도의 영상마저도 삭제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혀탈해 했다. 인권상황을 올바르게 봐야 할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올해의 인권현안을 왜곡시킨 셈이 됐다.

한편, 미장갑차 여중생 사망 무죄평결 규탄시위 중 머리를 다친 남자 부분에서 애초의 나레이션은 "공권력은 폭력의 수위만 높여가는데..."였지만, 인권위는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떨기만 한데..."로 수정했다. 에필로그의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계속된다...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았던 시간 다시 출발선에 선다..."는 "... 소외된 이에게 깊은 애정을 나누는 국민들, 인권은 바로 그곳에 있다..."로 변경됐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교묘히 비켜가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개인들이 사랑을 베풀면 되는 문제인양 본질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인권위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아]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면 '인권위' 기사에서 계속)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천시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권희필 제천시장은 '일부 언론에 미리 인권위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인권위의 '입단속'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됐다.

#### 언론보도 기피하지 말라

앞서 인권위에 불만을 표했던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건 피진정인이 담당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먼저 제천시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당시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조사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담당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을 때 인권위는 다른 상임위원으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는 인권위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기자는 "진정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인권위가 여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며, 조사과정이라도 중간발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진정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인권기준을 제시해 인권위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기자는 끝으로 "위원회의 공신력은 그런(언론보도를 통제하는) 식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직원들의 '입단속' 역할에 충실해 온 공보담당관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공개사건도 정보가 불충분하다

공보담당관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나마 공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얼굴흉터 산재 보상금 남녀 차등지급은 평등권 침해"라는 정책대외협력소위원회(아래 정책소위)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실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산재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소위는 지난달 25일 △의학적 타당성 문제 △이 법이 만들어진 60년대 사회통념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남녀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여기서 공보담당관실이 한 일이라곤 같은달 29일 M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뿐이다.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정책소위 위원 3명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래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 끝에 내려진 값진 판단인지 등의 문제의식이 M 2쪽 분량에 모두 담길 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공보담당관실은 적어도 인권단체와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정책소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뚝은 고스란히 기자들이나 국민 개개인에게 넘겨진 셈이다. 게다가 보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진정사건의 결정문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각하·기각 사건 비공개도 문제다

이번 산재보상금 남녀차별 건은, 사실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 9일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아래 차별소위)에서 각하되어 정책소위로 이관된 사건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진정이 차별소위에서 각하된 후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까지 국민들은 2달 보름이 넘도록 이 사건의 존재를 모른 셈이다. 그나마 이번에 정책소위가 정책권고를 냈기에 망정이지, 정책소위도 각하나 기각을 결정해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의 존재는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다.

각하·기각 사건의 비공개 관행에 대

해 남규선 과장은 "전원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하면 (각하·기각 사건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말과도 같다. 지난 9월 전향장기수 복송차별 건의 경우에서 보듯 <본지 10월 17일자 참조>, 각하·기각된 진정 중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스스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전향장기수 복송차별 건에 대해 사건발생 1년을 경과했다는 형식요건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공보담당관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각하 결정에 인권단체는 '비겁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나 차별소위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된 진정들은 전원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보고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보고 속에 전원위원회에서 중요 사건을 뽑아 공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각하·기각 사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사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남 과장은 "그 문제는 이전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였다"라며 "인권위 내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공보담당관실은 각하·기각 사건뿐만 아니라 비공개 안전에 대한 논의결과 또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범용)

(⇒1면 '기지촌' 기사에서 계속)

러시아 여성들도 큰 문제"라며, "그나마 필리핀 대사관의 노력 덕분에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나 다른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대사관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레방 유영남 원장은 "이주 여성들이 오기 전에는 한국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아직 많은 한국 여성들이 기지촌에 있다"며, 기지촌 내 한국여성의 문제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최용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3일(금)

제 22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중대범죄에 대해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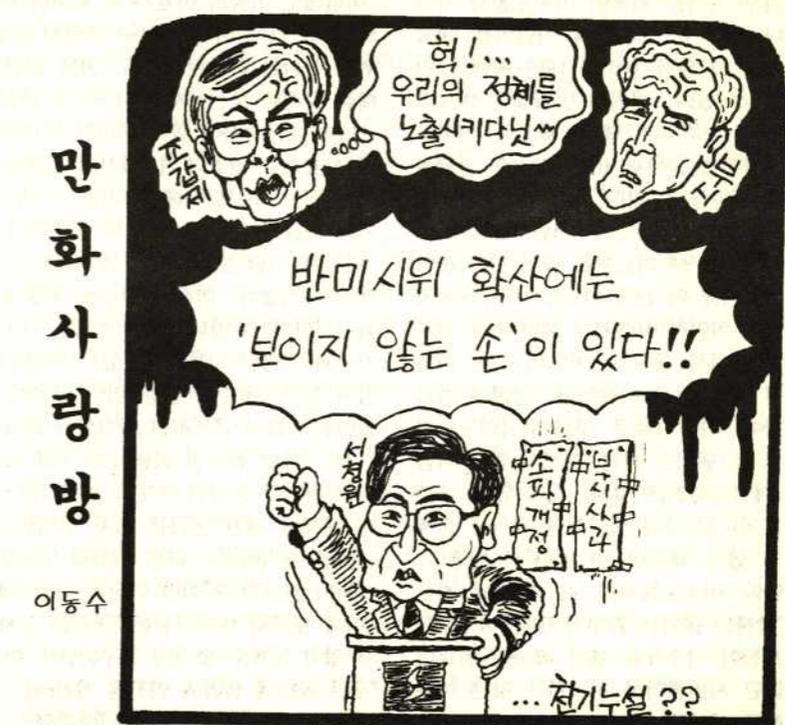
###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주한미군지위협정(아래 소파협정)의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그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미소파협정의 부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은 한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미군은 공무 중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선례가 없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는 "미군은 비공무 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한국 측이 재판권을 포기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리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라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중요하다고 결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부가 비공무 사건에 대한 1차적 재판권도 포기하게 하는 합의의사록 규정을 삭제하고, 양국 간의 재판권 포기에 관해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이장희 공동대표(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공무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와 공무 목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개혁국민정당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공무 범죄 모두 재판권이 우리나라 군 당국에 있다"며 "미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불평등하다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파견국에 전적인 재판권을 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며 지금은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한정해야지 그 이상의 것에 대해 허용해선 안 된다"고 (⇒2면에서 계속)

#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 미등록 신분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몽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몽골학교의 몽골인 오동투야 선생님은 "요즘 이곳 몽골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저녁 늦게 부모가 간신히 구해다 주는 약으로만 치료받아야 한다.

여기에 비싼 병원비도 한 몫 한다. 4살짜리 아이를 둔 한 몽골인 어머니는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지만 낫는 것보다 비싼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하소연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은 공적인 의료보장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 차원의 의료 지원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표적인 민간 의료지원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와 무료진료를 들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의 경우 가까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로 가서 5천원의 가입비를 내고 매달 5천원의 회비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발급해준 의료카드를 소지하면 의료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40%~7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약 1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한 상태지만 3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다. 이렇게 가입률이 적은 이유로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아프지 않은 이상(의료공제같은 것을) 찾지 않고 홍보가 덜 된 데다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영아 씨도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일일이 인근 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자녀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영아 씨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언젠가 파키스탄 가정에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3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공제회에 들면 자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몽골인 오동투야 씨는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가면 아이 혼자 집에 남는다"며 "아이 혼자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 마냥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인 경우

에는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이주노동자의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선천성 기형이라 현재 소아음급실에 있다"며 "이 아이의 경우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의료공제회, 시의 지원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정부에게 어떤 무상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료보험 제정이 거의 바닥수준인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들처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시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내고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미등록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희)

(⇒1면 '소파협정 개정방향 토론' 기사에서 계속)

다. 또 "과거 소련이 폴란드나 헝가리가 맺은 협정은 점수국가 관할실에 가까웠다"며 "이것이 평화주의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정희 변호사 등 사회단체와 정당 측 토론자들은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 이뤄진 미군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이나 합중국 군대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심판거부권 인정 등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자 도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동수사에 있어 한미양국이 협조한다는 선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한국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현장보존·현장검증·피의자 진술청취·수사기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날 토론회에선 소파협정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장희 교수를 비롯해 민주노동당·민주당·개혁적 국민정당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당국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대한민국 내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주병권을 인정하고, 미군 주둔의 목적 규정이 없고, 철수에 관한 협의 규정이 없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법제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당들은 국회 차원에서 소파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했고, 외교부와 법무부는 "2001년 개정된 소파협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불평등하지 않고, 다만 운영 상의 개선이 필요할 뿐"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토론회 방청객들은 "현실은 문제가 많은데, 소파협정이 전혀 불평등하지 않고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4일(토)

제 22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조실 수용자 직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의 제한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하에 그대로 두도록 해, 이번 권고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는 입실 거부로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조사실에 수용돼 있는 동안, 과도하게 인권을 제한당했다며 6월 21일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진정인 박모 씨가 조사실에 7일간 수용됐는데,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접견·서신왕래·집필·운동 등을 금지당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아래 징벌규칙)' 제7조 2항은 "소장은 규율 위반에 대한 징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기간 중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는 "광주교도소 측은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많아 징벌규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박 씨가 자술서에 입실 거부의 사유를 명시했고 조사실 입실도 순순히 응한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4월부터 6월까지 광주교도소 조사실에 수용됐던 징벌형의자 1백3명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99명이 조사실에 수용되자마자 운동·접견·서신교환·집필 등을 금지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징벌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 수용 즉시 징벌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징벌규칙 제7조 2항

을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나머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을 여전히 (⇒2면에서 계속)

##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무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 뿐이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들에게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플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가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30여개국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의 유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 회의'가 주최한 이 포럼은 아시아민중과 민간단체들의 유엔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지난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이후 인권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난 10년 간의 노력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동안 이어진 유엔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우리, 아시아민중은 뉴욕이나 제네바에 갈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유엔인권보장체계의 결과물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여기서 우리민중들과 유엔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발전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센굽타(Sengupta)씨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선언에서 인권보장은 도덕적 언명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인권보장'은 국제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의무가 되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관점으로 실현의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란 물음을 던지며 "민중의 참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가인권위 위원들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국의 국가인권위 위원인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라며 "민간단체의 의견은 모든 단계에서 청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위원도 "워킹그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해 민간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지구화와 사회권'에 대한 분과토론회선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무역·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는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방콕:류은숙)

(⇒1면에서 이어짐)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서신·접견·전화통화를 제한했을 때에는 '증거인멸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접견교통권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것이 개정 권고의 의미"라며 "이렇게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징벌 혐의자에 대해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백한 경우와 개연성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이상 교도소 측은 언제나 명백하다고 주장하기 마련일텐데, 그때마다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구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행정법 시행령은, 접견 중 증거인멸 등을 피하면 그때 교도관이 제지하거나 접견을 종료시키고 서신 역시 검열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그 때 사유를 알리고 발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도소 내의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 하면 될 일이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해 미리부터 외부와의 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 규칙을 남겨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기간 동안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견·접필과 서신왕래 등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도소 내 조사받는 수용자들의 인권 개선의 폭을 소극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주영)

###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 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제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11조에 저촉된다면 그 전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에 대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인근 각 대사관으로부터 모두 1백미터 떨어진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했다"며 "이를 금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집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7일(화)

제 22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김 연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통령이 지명, 임명했다"며 "청와대에서 새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심과장은 "인권위원회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어떤 위원이 사임하면 그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한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애초 국가인권위 설립 전, 민간단체들은 △각 분야 민간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절차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런 내용은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또 다시 새로운 인권위원이 아무 검증절

차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새 인권위원이 임명됐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지난 해 국가인권위 출범 전에도 인권위원 인선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또 비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활동해야 할 인권의 위원은 더욱 국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뽑혀야 한다"며 "현재 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고 인선 과정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을 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라며 "법률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규정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개정·보완돼야 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개적 검증절차를 스스로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02 아시아 시민사회포럼' 넷째 날인 12일에는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다. <관련 기사 본지 12월 14일자 참조>

'인권교육을 위한 민중운동'의 의장인 미나피플 씨는 인권교육을 법교육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경계했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어떤 법 문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인권은 법과 정치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요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짜느냐가 인권교육의 관건이며, 인권교육이 실생활에 작용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인권에 대한 '지식'과 분석하는 '기술'과 옹호하는 '태도'가 어우러진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교육과 인권은 구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인권교육 없이는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아태지국의 힐리건 씨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인권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정부가 국민의 85% 또는 90%가 교육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랑하며 그 나머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10~15%의 사람들이다. 교육은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말고, 교육 정책과 계획 속에 반드시 취약집단을 포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환경적 시민권'을 이해하고 획득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했다. 환경문제는 어려운 이론이나 잘못된 선전에 휩싸여 있을 때가 많다. 민중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환경문제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류은숙)

###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다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노하는가"라는 대목에 이르러 나는 가슴을 친다.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분개하지 못하고, 설령탕집 주인에게, 그리고 야경꾼에게만 분개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김수영 시인을 보면서 나는 더 부끄럽다. 그런데 나는 '큰 일에만 분개하였음'이 부끄럽다. 노동자들의 삶을 뒤엎는 신자유주의에 분노하고, 이라크를 침공하겠다는 미국에 분노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착취와 탄압에 분노하지만, 그렇게 비판해야 할 '큰 일'을 지탱하고 확산하는 '작은 일'에 나는 얼마나 무감한가.

힘들게 내 속의 작은 일들을 꺼내본다. 나는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약간의 거친 아이들이 내 아들과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 적도 있으며, 힘의 논리로 아들을 유학지르기도 했다. 실력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함께 일하는 동지들을 독촉하기도 했으며 공중전화로 걸다 그 부스에 기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보고 지레 놀라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줄 서있는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병원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나는 저들의 큰일을 공고하게 하는 작은 일을 끝없이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큰일에 분개한다. 내가 바로 그 분노해야 할 큰 일을 지탱하는 일상이었음을 잊은 채.

이러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대학 다닐 때 아침마다 정문 앞에서 가방을 뒤지는 전경들 앞에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방을 내밀고 빨리 이 귀찮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군부독재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군부독재를 지탱하는 작은 힘인 검문검색에 길들여졌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화장실 가는 길을 막고 서있는 전경들에게 화를 내며 몸싸움을 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게 되고, 동지들의 힘에 기대기보다 적당한 수준의 타협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련하다'는 칭찬을 할 줄도 알게 되고, 비정규직을 조직할 때도 적당한 수와 적당한 파급력이 있는 곳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머리를 굴릴 줄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나는 비겁하다.

내가 큰 일에 분노하게 됐을 때 나는 내 일상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내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의 모순들이 곧 내 안에 그대로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런데 큰 일에 분노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내 일상에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 일상에 분노하는 것은 기독교의 포기를 의미하고, 자본주의의 경쟁논리와 모순에 길들여진 내 육체와 정신을 끝없이 체찍질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나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안의 작은 분노를 깨워 일으키고, 일상에서부터 그 분노를 체워 변화시켜보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큰일에 분노할 수 없으며 그 분노로 세상을 바꾸자고 감히 말할 수 없기에.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1.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 들불의 물결

불교대책위, 단식기도 선언문 발표 (12.9)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전국적 반미확산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발언 파문 (12.9) / 7개 교수단체, 소파 개정협의 재개 촉구 (12.9) / 기독교청년협의회, '무기한 릴레이 금식기도' (12.9) / 우리만화연대 '만인'·시사만화작가회의, 반미만화 작품전 (12.10) / 전국비상시국회의, 각계각층 대표자 참석 (12.11) /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소파 전면개정 요구 / 범대위, 국무총리 만나 14일 촛불시위 평화적 개최 보장·소파개정 요구 (12.12) / 사진가 1백인, 미대사관 앞 카메라 놓은 채 30분간 침묵시위 / 보건의료단체연합, 소파개정 및 이라크 전쟁반대 1천인 선언 / 부시 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전화대화 여성생 사망사건 사과 (12.13) / 유족·범대위, 사태의 근본원인 언급 없는 부시 사과 수용 불가 / 서울 등 전국 57개 지역 촛불 시위 (12.14)

#### 2. 국제적 인신매매, 한국의 기지촌

새우터 등, 선불금 묶여 성매매 강요당하는 여성 없도록 관련 업소 수사 김·경에 촉구 (12.9) / 교회여성연합회, 기지촌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상 폭로 (12.11)

3. 검은 그림자 : 미국, 북한 미사일운반선 예멘 동쪽 인도양서 나포...예멘, '방위용 구매, 돌려달라' 항의 (12.9) / 북, 핵 동결조치 해제...미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 밝혀 (12.9) / 미국, 북한 선박 풀어줘...'미국 국제법 무시' 비판일어 (12.12)

4. 기타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태국방콕 유엔센터에서 개최 (12.9~13) / 서울시, 서울지역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강행...노조 플랫폼 선로 점거 30여분 운행중단 (12.9) / 환경운동연합,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 기름오염 기준치 8배 넘는다 밝혀 (12.9) / 서울시, 용산 미대사관 담장 안에서 기름오염 (12.10) / 천주교인권위, 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재심 청구 /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 양심수 전원 석방 수배해제 촉구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 (12.13)

○ 주요 판결 : 서울지법, 병역거부 혐의 구속기소된 나동혁씨 징역 1년6월 선고 (12.10)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앞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판결 (12.13)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일시: 12월 18일 오후 8시 ○문의: 02-741-5363  
○장소: 성균관대 앞 '5th AVENUE'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8일(수)  
제 2240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이주영

##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광고

### "냉전적 국가 신고체제, 대민 불신만 조장"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접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우체국을 찾은 인권단체 활동가는 장당 1백50원에 우편엽서를 구입할 수 있었다. 보통 우편엽서는 장당 1백60원에 판매된다. 이에 그 활동가는 '이 엽서는 왜 10원이 싼 거예요'라고 물었고, 우체국 직원은 우편엽서를 가리키며 '거기 있는 광고 때문에 그럴 거예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우편엽서 왼쪽 아래편에는 6x3센티미터 직사각형 크기로 간접 및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상담전화를 알리는 '국정원 광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공엽서'에 대해 국정원 측은 "지금까지 국정원에는 신고전화, 민원전화, 안내전화 같은 것이 7개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됐다"라며, "그래서 새로운 전화번호가 생겼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홍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엽서홍보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체국에 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고르는 사람 마음"이라며 대공엽서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우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지역에 5만장 이상을 주문하고 장당 30원씩만 내면 국민 누구나 우편엽서에 광고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광고의뢰가 들어오며, 국정원은 1년에 1번 정도씩 엽서홍보를 한다고 한다. 광고우편

서에 대해 우체국은 10원을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그런 (냉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냉전의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93년 안기부에 의해 조작·발표된

'남매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예의주시케 하는 신고를 통해서 대민불신만 조장한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최연소 장기수로 99년 출소한 강용주 씨는 "지하철에 가면 '신고하라'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그림과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공익 광고냐"라며, "어렸을 때 동네 앞에는 '이웃집에 오는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는 간판이 있었는데 (대공엽서도) 결국 어투만 바뀌었지 똑같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범용)

###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펴낸 곳: 대한변호사협회 (02-3676-4003) / 펴낸 날: 2002년 12월 / 505쪽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인권상황을 개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현)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제도적으로나마 신장시키고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2001년 한 해 동안 2백4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은 4년 동안 이미 6백86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구속자 6백32명을 훌쩍 넘겼다.

그 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은아)

###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17일 해외 활동가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씨가 참여해, 반군사주의 일환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관심을 끌었다.

스펙 씨는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원칙적인 행동으로서 '군대

의 인원을 보충하는 수단'인 징병제 뿐 아니라 '국방의 민간 부분을 담당'하는 대체복무까지 반대했다"며, "병역거부에 이르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접근이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인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징병제의 종속물'이라고 반대

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수천 명이 감옥행을 불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스페인의 징병제는 결국 폐지됐다. 이에 대해 스펙 씨는 "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강조점이 있다기 보다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집단적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접근은 군사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독일의 경우, 군대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개인적이고 탈정치적인 병역거부자를 낳은 한편, 독일 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면 군사적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것인지 등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막을 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의 권력과 영향력은 확장되는 반면에 유엔의 영향력과 자원은 부식되는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에 관한 지구적 결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강화하고, 밀레니엄 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이행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밀레니엄 발전목표'란 유엔 전체 회원국인 1백89개국이 2000년 12월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극빈과 기아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성취, 성평등 증진' 등 8개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세기 지켜지지 않은 숱한 약속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이것만은 성취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을 담고 있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들에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책임의 증진 △아시아지역에서 확장일로에 있는 군사주의를 후퇴시키고 군사기지 주변에서의 인권과 환경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아시아인종들의 의지라면 당연히 표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의안에는 "우리는 외채, 이민, 무역 및 군사·안보정책 등에서 선진국가들의 외교정책이 세계 민중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여론을 상기시키고 공동의 캠페인과 행동계획을 취할 것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초강국의 시민인, 미국민의 인식향상과 대화 증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구절이 삽입됐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www.acsf.net에서 볼 수 있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19일(목)

제 22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 돼

###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사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사 3만8천5백80명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는 이 달 말까지 인증서 발급을 끝내도록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와중에서 일어났다.

이에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즉각 환수 및 폐기와 일체의 인증 강요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추진단 관계자는 "많은 수의 교사 기록이 있으니 담당자만 보고 폐기하라고 시정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에 대한 인증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사들이 인증을 해야 시스템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서울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며 "각 학교에 인증을 '독려'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50% 가까운 교사들이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의 개인정보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보안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식의 교육당국의 태도다.

삼성 SDI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취미·특기·성적·상벌, 상담 등 학생활동관찰 기록, 질병 기록까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 가족사항 역시, 부모의 이름·주민번호·전화·직업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한 마디로 만 5세부터 20대까지 한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는 것. 더구나 이 시스템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까지 입력돼 있다. 졸업생들에게 개인정보 집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교사와 관련해서도 근무사항·개인신상·재산·정당/사회단체·가족·학력·적성검사 등 22개 항목에 따라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교육부는 증명발급이나 학생 정보 열람을 학부모나 졸업생이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홍보하고 있다. 덧붙여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돌려본 후 개선해나가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 "2중, 3중으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김학한 정책실장은 "학생과 교사의 모든 인적 사항이 집중·관리되는 시스템 자체가 인권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들은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이중 학사나 교무행정에 필요한 부분만 현재처럼 각 학교 단위에서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골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 특별 기획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 첫째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어떤 인권과제들이 선정되느냐는 점, 셋째는 선정된 과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 선정기준·절차는 어떠한가

국가인권위는 23일(월) 열리는 31차 전원위원회와 27일(금) 사무처 간부와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내부 워크숍에서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시민사회쪽 의견수렴 방안은 논의된 바 없으며, 일단 두 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쳐 '2003 프로젝트'의 뼈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권위의 관계자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2003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특별기획사업의 선정기준도 관심사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역량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제는 10여 개 정도(11명의 인권위원이 각각 과제를 맡을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느냐는 점.

결국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진도 요구된다. 참고로, 지난 9일 열렸던 전원위원회의 논의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예로 제시됐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다른 국가기관에서 접근하기 곤

란한 사안으로 중대한 인권관련 사항.

● 국가보안법 등 선정될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역시 '어떠한 주제로 몇 가지 과제가 선정될 것인가'의 문제.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논의 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포스(기획)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2003년 특별기획사업을 추진할 지 여부조차 확정된 바 없다"고 전제하며, "위원들마다 각자 관심을 갖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중과제 추진 주체는?

'2003 프로젝트'의 추진이 확정되고 주요과제가 선정된다면, 남은 문제는 어떠한 단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에서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전원위원회에서는 '태스크포스팀(Taskforce Team) 구성'이 논의안건으로 제출됐다. '워킹그룹'이든, '태스크포스팀'이든, 이른바 '기획단위'가 구성되면 선정된 과제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집중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의 공식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위를 통한 사업추진은 올해 국가인권위의 주요한 사업방식이었던 '연구용역'과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가 직접 '총대'를 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소위에서 논의된 '워킹그룹'은 '인권위원+사무처 국·과장+외부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는 단위로서, 이는 인권위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처의 실무력과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한다. 여기서 어떠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인권위의 활동 기반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하느라, 인권현안이나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2003 특별 기획사업은 주요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결정 여하에 따라, 2003년은 '인권의 신장'을 향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창조)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무분과 운영과 각국의 인권위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인권위원회는 특정 주제에 따라 세계 5개 지역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인권전문가들로 워킹그룹(실무분과)을 구성하고 있다. 이 실무그룹은 특정 분야나 의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사례를 분석한 뒤, 이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함으로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권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실무분과로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가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의 산하기구로서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인권소위원회 역시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소위 산하에서 활동중인 실무분과로는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분과'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 등이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21일(토)

제 22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채우면, 3개월 후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휴먼라이츠워치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 및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캠페인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온 이들이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협약의 발효를 환영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증이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 전세계의 이주민의 숫자는 1억5천9백만 명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 까지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생존권, 가족행

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

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미선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출신국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고용, 출국, 이동, 체류, 출신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등(⇒2면에서 계속)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둬지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강직함이 요구되는 자리다. 거기에 도덕성과 현신성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인권위원회에 걸맞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인권위원직을 내던진 이진강 전 위원장의 사임이유는 '대한변협회장직 출마'였다고 한다. '자신의 이력'을 위해 인권위원의 자리를 내던지는 인물은 결코 국민이 바라는 인권위원이 아니다. 1기 인권위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폐쇄화함으로써 자신들을 '베일'에 싸버린 태도 역시 스스로 자질 없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후임자에 대한 인선과정은 달라져야만 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뒤 오히려 떳떳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임위원의 임명 전에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데엔, 이진강 위원장의 사임소식을 함구한 국가인권위의 책임도 있다.

달라져야 할 점은 분명하다. 첫째, 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개검증을 가로막는 현행 인권위원회법은 서둘러 개정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위원회에 대한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 인권위원의 활동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여 주어야 하며 (⇒2면에서 계속)

#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인사동의 미로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단편, 중편, 장편 부문으로 나뉜 경쟁 부문과 국내외 초청부문으로 구성된 이 영화제의 상영작은 모두 60여편. 올해의 독립영화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이며 국내 유일하게 독립영화에 대한 경쟁영화제라고 주최 측은 자부한다.

상영작에서 '인권' 영화를 살펴보면 <백큐멘터리>를 만든 최진성 씨의 신작 <그들만의 월드컵>과 부산영화제를 통해 첫 상영된 작품으로 재독 학자 송두울 씨를 기록한 서울영상집단의 <경계도시>, 그리고 서울 황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동네를 담은 이승준 씨의 <폐허, 숨을 쉬다>가 있다. 이승준 감독은 2000년 인권영화제에서 인도 비하르 지역의 정치 갈등을 다룬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보인 적이 있다.

"월드컵 유감!"이라고 말하면 4700만(?) 붉은 악마들에게 물매 맞으려나?" 최진성 감독이 <그들만의 월드컵>을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 작품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는 월드컵의 이상 열기는 현실의 억압과 모순을 가리는데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월드컵에 가리

워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축구공을 만들다가 실명 위기까지 이른 인도 소녀를 취재했다. 작품은 '월드컵만큼'이나 이들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송두울 씨는 아직도 한국정부로부터 간첩혐의를 받고 입국 금지된 상태이다. 늦봄통일상 수상 차 귀국하려 했던 그는 당국의 사상시비로 입국이 좌절된다. <본명선언> 등으로 알려진 홍형숙 씨가 연출한 이 영화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울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찾아와 내용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제작자들은 전하고 있다.

곧 파헤쳐질 철거지역에서 텃밭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팔순의 할머니에게 카메라의 렌즈를 밀착시키고 있는 <폐허, 숨을 쉬다>는 생명을 가꾸는 손길과 파괴된 철거지역을 대비시킴으로써 개발 정책의 비인간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상영작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http://www.siff.or.kr/>에 나와있다. [김정아]

(=>1면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기사 이어짐)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그 규정들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들이거나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로서,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이집트, 가나,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모내는 나라들에서의 송출비리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고용국인데, 이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협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앞으로는 외국인력 고용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해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이자 고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내년 3월에 강제 추방 위기가 예고돼 있는데, 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존중하면서 보다 인권에 부합하는 쪽으로 국내의 외국인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는평 1면에서 계속)

신임 인권위원부터라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듯이, 검증 없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국민 인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체 모를' 인물들에게 우리의 인권을 맡기고 싶지 않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24일(화)

제 22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었던 류 씨는 "한국에 인권침해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참관했던 최영도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였는데, 당시 정부측을 대표해 나온 류 씨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만큼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인권이사회 위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물으니,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고 류 씨를 기억했다.

또한 류 씨는 99년 수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이란 이종기 변호사가 검찰, 경찰 및 법원직원에 사견 소개비자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처벌된 사건이다. 당시 많은 검사·판사·검찰 직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음이 드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류 씨 역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일하던 98년 2월 병원에 입원 중이 변호사로부터 위문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검찰은 류 씨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류씨는 부산고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3일 다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반인권·비리전력자 류국현은 인권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를 향해 류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경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선과정은 어떠한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밀실인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 법개정 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개 인권단체들 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날 낮 1시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류 씨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류 씨가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때에 맞춰 긴급하게 열린 것이다.

집회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교수는 "인권위원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인권을 가

장 앞장서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조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인권위원이 된다니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92년 군사 정권 시절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과연 2002년, 2003년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인권위원 일을 해나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인권활동가들은 2시계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건물 13층으로 자리를 옮겨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류 씨는 3시 예정인 회의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인권활동가들이 자리를 뜬 후인 4시계 뒤늦게 전원위원회에 참석했다.

김창국 인권위원장이 류 씨를 소개하자 회의를 방청 중이던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는 "반인권 비리전력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을 거부한다"며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범용 상임활동가는 류 씨가 인권위원으로 인선된 데 대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원 인선기준과 절차 및 밀실인선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앞으로도 류 씨의 퇴진을 포함해 인권위원의 올바른 인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범용·이주영]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수감자가 민주적인 이상을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 금서목록이 없다."

<알림>

## 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해 인권위원들의 임명 과정에서 보여졌던 밀실인선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덜컥 임명한 청와대와 인권위원의 사임을 알리는 등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갖는다.

○때 : 12월 23일 낮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곳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인권위원 검증 절차 만들어라!"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

2002년전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했다. 고대사회 당시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여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라, 노예는 사람이 아닌 가축이나 동물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척박한 시대에 예수는 세상을 향해 감히 '생명이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 했다. 이 귀중한 생명을 위해 그는 끊임없이, 철저히 낮은 곳을 향했다.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 가난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억압받는 자를 위해, 민중을 위해 그는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했다.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나에게도 인권을 가르쳐 준 이가 있었다. 2년전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외할머님이 그분이시다. 할머니 89세의 성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서부터 인생과 시대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분들의 세대는 실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공존한다는 등식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세대들이었던 같다.

그들은 20세기초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해 버린 조선 왕조의 절대절명의 위기인 구한말에 태어나서 봉건시대를 겪어야 했다. 또한 저 기억에서조차 떠올리기 싫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식민지 시대로 겪어야 했다. 포로의 생활, 치욕의 시대를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민중들이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3년이라는 미군정의 식민지 경험을 거쳐 동족상잔이라는 끔찍한 한국전쟁의 와중에 집단학살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했던 그런 세대들이었다. 평생을 노점상으로 일구시면서 구한말부터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함께 걸어야 했던 눈물의 삶, 이는 한없이 슬프고 가슴저려 아픈 민중의 노래였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이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못내 힘들어 쓰러 지질 때마다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민중은 항상 내 가까이 서 있었다. 다름 아닌 할머니이었던 것이다. 민중이라는 단어가 힘들어 지질때에는 항상 추상이 아닌 실존으로 가까이 계신 할머니를 보면서 위로와 용기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심 대단한 지표로 삼았던 것 같다.

2002년전 팔레스타인의 예수가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산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예수는 예나 다름없이 또 낮은 곳으로 향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병든 자를 향해, 가난한 자를 향해, 억압받는 자를 향해 사회운동을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것은 분명 화려하지도 찬란하지도 않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다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시대에 사회운동가로 태어났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내가 내심으로 사회운동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선진들의 후예라는 자긍심이 한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1. '인권'위원 뽑은 거 맞은거? 인권운동사랑방,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대해 규탄성명...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 (12.16)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왜곡 발언 및 99년 소위 '대전법조비리' 연루 사실 드러나 (12.23) / 2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요구...국가인권위 앞 향의 시위 (12.23)
2. 경찰·군인, 세금으로 누굴 지키는 건가? 경제5단체, 수출타격·투자위축 우려 국민들에게 반미시위 자제 요청...양대 노총, '국민정서 무시 낮은 냉전논리' 반박 (12.16) / 녹색연합, 2000년 이후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 21건 책임자 처벌·복원 약속 이행 없이 유사사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밝혀 (12.17) /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소파개정 요구 시민단체 '친북 NGO'로 규정 카투사 사병들에게 교육 물의 (12.18) / 제1차 미대사관 추방 인간띠 잇기 대회, 3천여명 참석. 경찰 저지선 뚫리자 방패 등 휘둘러 수십명 부상 과잉진압 물의 (1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2.17) /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 (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 발표...유출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 (12.17)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열려 (12.17) / 이주노동자 공대위, "개별면접 조사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357명 중 한국에 온 뒤 임신한 외국인 노동자 14.5%. 이 가운데 56.3% 유산 경험. 12.1% 직장 내 성추행 경험했다" 발표 (12.17) / LA 타임즈,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2% '이라크와 전쟁 명분 부족' (12.17) / 반전회의, '미국의 세계화와 이라크 전쟁을 함께 반대하자'라는 구호 아래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미국의 이라크 침공, 석유 빼앗고 세계 유일 패권 장악이 목적이다' 비판 (12.18) / 미국,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완벽하게 신고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주장 ... 러·중·아랍 반발 (12.19) / 미국, 쿠웨이트서 걸프전 이래 최대규모 훈련. 1월 초 이라크 인근 지역 추가 파병 (12.2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25일(수)

제 22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성모병원, 대화에 나서길”

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파업전야제부터 지금까지 마음은 똑같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탄 전날인 24일 오후, 십자가를 가슴에 모아 들고 명동성당 돌레를 돌던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오선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여의도성모병원 조합원 한모 씨도 바라는 한가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5월 23일 시작된 가톨릭 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24일로 이미 7개월을 넘겼다. 그러나 파업 전부터 지금까지 병원 측은 한번도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9월 11일 경찰력의 투입으로 농성 중이던 병원에서 풀려 나온 후,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 농성의 터를 잡았다. 지난 11월 15일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명동성당 서울대 교구청 내 천막을 자진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직권중재조항이란 악법에 기대어 '무조건 현장복귀'만을 고집하며 개별적으로만 조합원들을 만날 뿐이다.

“서로 생체기도 많이 남겼지만 이젠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마음으로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노조를 인정했으면 한다”며 오 씨는 말을 잇는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4백여명의 조합원들은 23일부터 출퇴근 루트가 아닌 2박 3일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성탄절 전에 타격을 기원하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노숙농성이라지만,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천막도, 스티로폼도 없었다. 오씨는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비닐을 덮긴 했지만, 조합원들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걱정을 한다.

그간 겪어온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비하면 하루 밤 비 맞는 것은 별개 아닐지도 모른다.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사업장들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힘든 싸움한다고 한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일부러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가톨릭을 믿고 싶은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에서 10년째 일해온 전모 씨는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같은 병원에서 영양과 조리원으로 10년째 일해 온 유혜영 씨는 “월드컵 지나면 달라지겠지, 추석 지나면 달라지는 게 있겠지, 매년 희망과 절망을 넘나들었다”고 말한다. “마이너스 대

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한 씨는 덧붙인다. 7개월을 지나는 동안 1천5백명이었던 파업 참가자가 4백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파업 대열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엔 노조에 ‘노’자도 몰랐는데,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알았다”고 유 씨는 설명한다. 또 다른 전모 씨는 “나도 가톨릭 신자긴 하지만, 희생만 요구하는 게 직장인가 싶다. 병원 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복귀하면, 반성문을 써야 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문제제기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혹한 속 노숙농성에도, 병원 측의 태도가 바뀌지 (→2면으로 이어짐)

<바로 고칩니다>

본지 24일자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인권위원' 기사 내용 가운데, 99년 류국현 씨는 '부산고검'이 아니라 '대구 고검'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998~2002년 각종 인권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국정감사자료가 주는 미덕은 민간영역에서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자료들은 국정감사 동안 제공된 모든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상임위·주제별로 묶어 재가공한 것이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은아]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Tel02-741-5363)

#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유엔 심사 앞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간담회' 열려

"이번에는 준비된 문건만 읽고 끝내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 과정과 결과물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측에 대한 요구와 당부를 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경청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는 지난 96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민간단체들은 96년 1차 보고서 심사 때를 돌아보며 크게 몇 가지를 지적했다. 준비된 문건만 읽을 작정으로 회의에 임했던 정부대표단의 성의부족,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식의 왜곡·거짓 보고, 국민에게 보고서 제출과정과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이번 2차 보고서 심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생산적인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토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성실한 준비는 필수이다. 또한 인권문제란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므로, 솔직하게 인정할 문제는 인정하는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어선 지금 취해야 할 성숙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이경아 외무관은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도 격려에 집중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 소외된 아동에 보다 관심을

이러 민간단체들은 복지, 교육, 장애 등 개별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스르기사랑나눔회의 송경아 부장은 소외된 아동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결식아동 문제는 '밥'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대도시를 벗어나면 폐교로 인해 아이들이 점점 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곤란을 겪는 점, 아동학대방지사업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도별 한군데 센터만으로는 아동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협약에서는 가정환경상실아동에 대한 보호의 우선순위를 가정위탁 다음에 입양 그리고 적절한 육아시설로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환경상실 아동이 시설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홍의표 인권교육국장도 "1·2차 보고서에서 누누이 지적되었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교를 포함한 기존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종호 사무관은 "각 부처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교육부와 협의체계를 갖춰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리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내용이 교원 연수 등에 도입되고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속에서 장애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쪽 자료는 법과 정책에 대한 형식적 나열이며 통계자료도 불충분하다. 장애아동 인과과약,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과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태조사가 있어야 분명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리는 형편이다. 시설 입소는 장애아동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에 떠밀려서 이뤄지며, 6백여개에 달하는 미인가시설의 상태는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 심사회의는 다가오는데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99%를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1%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 집중하고 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보다는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들의 권고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민만기 검사는 "아동권리협약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며 "소년사법문제도 보호과가 아니면 잘 모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네바회의 참석 전에 바빠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너무 '솔직'한 발언을 해서 민간단체 참석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민간단체보고서를 준비했던 13개 민간 단체 중에서는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회의는 2003년 1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고, 정부대표단은 10여명 규모로 구성 중에 있다. [류은숙]

(=>1면 '성모병원' 기사에서 이어짐)  
않는다면? 머뭇거리던 오 씨의 답변. "다들 마음에 불안감 있을 텐데, 애써 외면하고 있을 거다. 진정한 가톨릭이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근데, 정말 답이 없다면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겠지."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27일(금)

제 22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법무부 형법·형소법 개정안 반대 빗발 수사편의 위주, 인권보장 뒷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고자 기도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정책담당관실은 "대법원 기초실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일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논평을 내,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회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 보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 연장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

분석 보장 :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인이 입회 하더라도,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등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수사상 가장 필요하다"는 구속 후 48시간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고 가장 질실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라며 "따라서 변호인의 신문 시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 범죄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반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

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히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신설은 피의자에 대한 자백강요가 불가능해지자 일반 국민인 참고인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다"며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방해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반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변도 "특정사건에 관해 구속수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주영]

###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종료

216일 동안 장기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 가톨릭 중앙의료원 지부 4백여 조합원들이 24일 밤 11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30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용문 강남성모병원 지부장은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병원측이 줄곧 주장한 것이 선복귀·후대화인데, 과연 그게 어떤 건지 지켜보지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투쟁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몽골학교에 다니는 40여명의 아이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제한적이지만 그 자녀에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부모 모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경우는 전혀 구제조항이 없다.

이 땅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법적으로 '무국적' 신분이 되는 셈이다.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온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를 뒤따라 '불법'의 신분이 된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의 아이들' 혹은 '이주해서 불법의 신분이 된 아이들'은 어른들도 견디 내기 힘든 '불법'의 딱지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야 한다. <본지 5일자, 13일자 참조>

이 때문에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관장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부부가 이런 현실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궁여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몽골인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한국에 있다가 아이들

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가족 모두가 다시 몽골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물론 아이들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몽골학교에 다니던 오양가(15)는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왔다가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혼자서 몽골로 돌아갔다. 혹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빨리 커서 함께 돈을 벌어주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몽골인 오동투야 씨는 "함께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여행차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이정훈 씨는 "몽골에 갔다가 한국

에서 살다온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본적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몽골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혹은 한국에서 방치된 채로 지내다가 범죄를 저질러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

몽골학교에 다니는 빠담지체크의 사촌 오빠(15)는 얼마전에 자전거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그 아이는 홀로 강제출국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이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현재 국적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최홍희>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은 인권교육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보다 특화된 영역이다. 평화인권연대는 '봄길'이 되는 사람들'이란 소모임을 통해 갈등해결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을 하고있다. 활동가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을 '교육이란 거창한 이름대신 평화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화습관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연을 맺게된 미국천우봉사회는 99년 평화문제에 관심있는 국내 활동가 16명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전문가훈련프로그램을 1년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침은 봄길'이 되는 사람들 안에서 배운 것을 풀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월간 평화연대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월례도론회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듣기', '함께 일하기' 등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해 수원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2주에 1번씩 4달 동안 교육활동을 진행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 아이들과 여러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발생하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파고드는 것이 관건. 아침은 "화가 난 아이는 마지 화를 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가 화를 풀만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화를 내던 아이가 흥미를 보일만한 놀이를 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화난 친구와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궁리하면서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아침은 "아이들은 놀이와 화해를 통해 평화라는 단어를 익혔고, 어른들은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좋아했다"고 평가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가을엔 경기남부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평화교육을 하는 방법과 조합 또는 교사 사이의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이었다.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은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며 "내 경우도 일하면서 싸우고 고집 부리던 모습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갈등해결교육은 누군가의 손을 일반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대화로 갈등의 근원을 찾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자칫 인권교육은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전달이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갈등해결교육의 바탕 위에 인권교육이 어우러진다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2월 28일(토)  
제 22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2002년 중간호>

##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2002년이 저물고 있다. 회한과 기쁨이 교차했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시위'는 가장 의미 있는 현상 중 하나였고,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소과개정'과 '부시 사과'로 집약된 한국 민중의 요구는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은 그 표상이다. 금단의 벽을 향해 내리꽂혔던 촛불의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오는 31일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반미'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존재에 대한 한국 민중의 자각과 행동의 표출은 반세기만에 한미관계의 지평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며 분출하는 한국 민중의 에너지가 자칫 '민족주의'의 협소한 틀로 용해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지 한반도 남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반미시위는

민족주의를 넘어 전 지구적 반전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남단의 '반미열풍'은 이제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반대와 세계평화의 호소를 이끌 수 있는 전세계 민중의 희망이다. 2002년의 대미를 장식할 우리의 목소리는 '소과개정' 뿐 아니라 '전쟁반대'와 '미국의 패권전략 반대', 그리고 '세계평화와 동등한 국제관계의 형성'을 촉구하는 합성이 돼야한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점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진행한 전쟁과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책동은 미국의 패권전략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올 5월 영국의 한 신문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숨진 사람이 많게는 8천명에 달하고, 폭격에 따른 구호물품 중단 등으로 희생된 생명이 2만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올해 내내 국제사회를 긴장케 했던 이라크와의 전쟁설도 2003년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걸프전 이후 십수년에 걸친 경제봉쇄에 의해 이라크 사회는 이미 파멸의 대로 피폐돼 있다. 지난해 이라크의 보건부는 경제제재에 따른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한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1천명당 131명에 달하며, 십여 년 간 어린이를 포함해 2백만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숨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라크 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

제재에 따른 희생자가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무력침공을 통해 더 많은 피와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전쟁위기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곳은 바로 한반도이다. 모라모라 피어오르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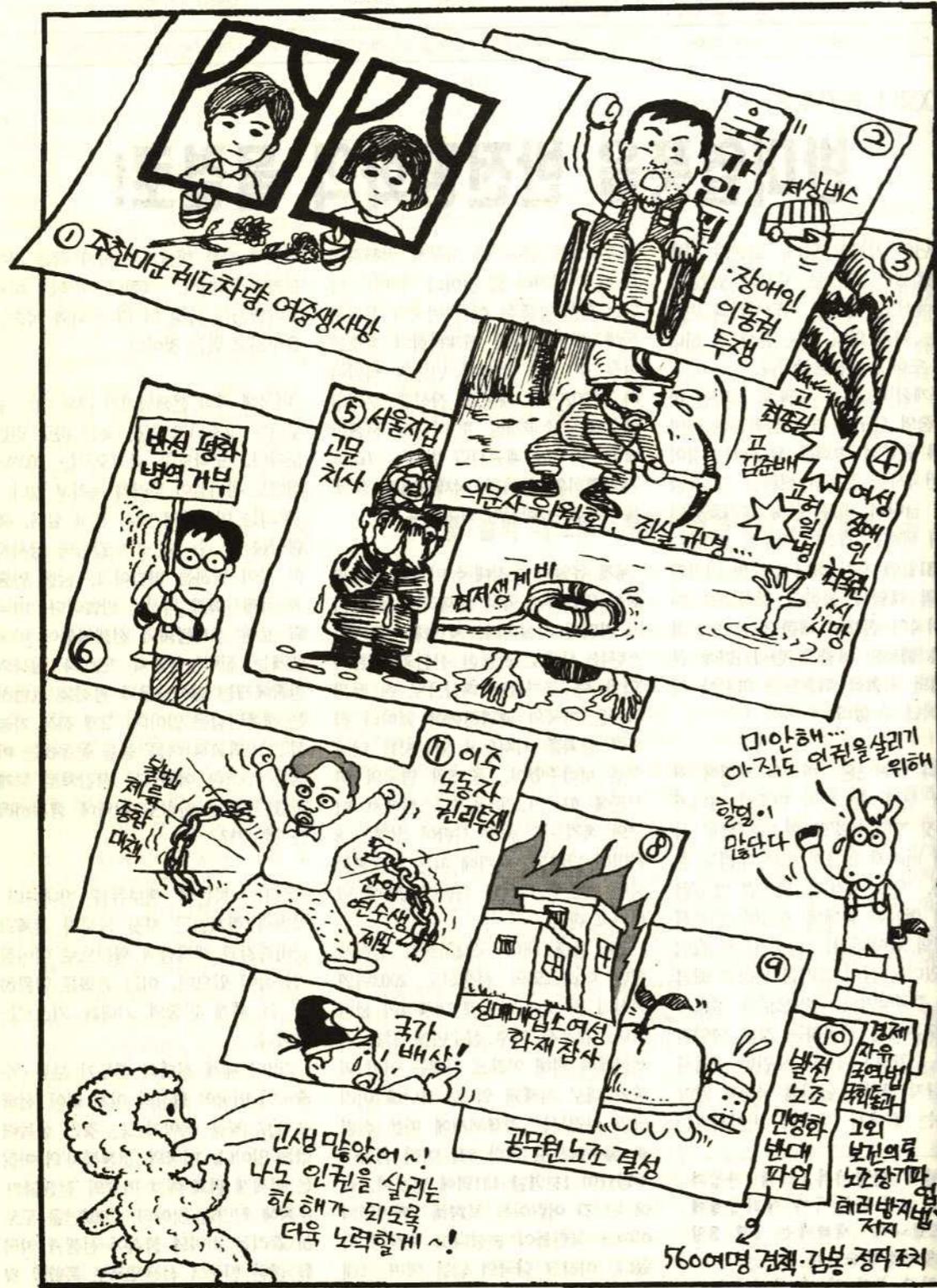
우리는 미국에게 따져 묻고 싶다. 왜 협상을 할 수 없는가? 갈등의 당사자인 북이 원하는 방법이고, 남한 민중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오랜 경제봉쇄와 전쟁책동이 미국에게는 전략적일지 모르나 남북의 민중에게는 민족보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폭탄같은 일이다. '2개 전쟁 가능성', '비외교적 대응' 등을 운운하는 미국은 무고한 여중생을 장갑차로 밟아버렸던 일을 한반도 전역에 행사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자칫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과 핵개발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민중의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수출국인 미국이 협상의 여지 없이 '선택포기'로 북을 억박지르는 것은 설득력 없는 일이다. 미국의 '전쟁불사'의 아집은 전세계 평화 애호 민중의 '전쟁불가'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02년을 도도히 흘러온 반미의 물결이 전쟁광 미국을 향한 민중의 선전포고로 폭발할 것임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관심과  
적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1월 3일  
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되십시오.

# 2002 인권 10대 뉴스



##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흐름과 쟁점

####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없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등 예술인들도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했다.(12.6, 10, 13)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소파개정을 약속했다. 여중생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12.4) 백악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12.6) 삭발식도 거행했다.(12.8) 네티즌들도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냈다.(12.1~) 부시 미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12.13) 유족과 범대위는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14)

한편,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12.7, 14, 21, 24),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 구역까지 허물었다.

####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격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됐다. 김 대통령이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2.16)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라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 검증절차를 스스로 거처야만 한다"고 촉구했다.(12.16) 한편, 류 신임 인권위원은 과거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예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반인권·비리전력자 류국현은 즉각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 인권위원 임명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 앞에서 류씨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2.23)

#### 3. 성탄절까지 이어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난의 행군

5월23일 파업에 돌입, 7개월 넘게 장기파업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3개성도 병원 지부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했다.(12.2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조항이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범이었다. 병원 측은 위협적인 직권중재조항에 기대어 교섭을 거부하고 병원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9.11),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이어나갔다. 천주교 평신도들의 파업사태의 해결 촉구 선언(10.10),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로마교황청 방문(10.21), 법률전문가들의 '직권중재철폐선언'이 잇따랐지만(11.15) 병원 측은 꿈쩍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성탄절 전 타격을 염원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철야농성에 들어갔지만(12.23) 변함 없는 병원 측의 태도에 조합원들은 결국 현장에서의 투쟁을 기약하며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상 최장기 파업의 종료를 선언했다.(12.24)

### 논평

-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12.7)
-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12.14)
-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12.21)

### 인권이야기

- 폭력과 미국의 책임(12.3/김정아)
-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12.10/한상희)
-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12.17/김혜진)
-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12.24/이영일)

### 인권정보자료

- 정보화사대의 인권① '자기정보통제권' '만남시권'(12.4)
- 정보화사대의 인권②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12.11)
-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12.18)
-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12.25)

### 기획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12.27)

### 연재-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12.5)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없다(12.5)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12.12)
- 인권위, '입장없다'며 인권현안 왜곡...인권위 영성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12.12)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12.19)

### 중요 판결

- 서울지법 형사합소2부,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이유로 국보법위반죄로 실형선고된 김강필 씨에 대해 위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12.3)
- 서울지법 민사 40단독, 금지중 재소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은 위법...국가배상 판결(12.6)
- 서울지법 형사8단독, 병역 거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12.10)
- 서울행정법원 제4부,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판결(12.13)

### 2002년 인권 10대 뉴스

-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 국가인권위 접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
-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하나를 밝혀내
- 빈곤의 늪,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 죽음
- 서울지법, 피의자 고문처사사건
- 비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전원취방 방침에 맞선 이주노동자 권리투쟁 활발
-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 공무원노동자, 정부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발전 민영화 반대 파업...사측, 보복성 인권유린